

연구자료 25-16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과 한-EU 협력방안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안보, 세계지역연구, 국제개발연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과 한-EU 협력방안

오태현

연구자료 25-16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과 한-EU 협력방안

인 쇄 2026년 3월 10일
발 행 2026년 3월 16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02-6948-9650)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534-0 94320
978-89-322-2064-2(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연합(EU)의 군사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EU 차원의 통합 논의는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는 고도로 발전해왔으나, 군사안보 분야는 회원국 고유 권한과 초국가적 주도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통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안보 지형은 큰 변화를 맞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 내 전면전이 발생한 것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NATO에 대한 EU의 과도한 의존을 비판하며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EU는 자체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위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EU 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우 전쟁 이전에도 EU는 상설구조화협력(PESCO), 유럽방위기금(EDF),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등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을 모색해 왔다. PESCO는 회원국들이 더 긴밀하게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데, 현재 75개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에 있으며, EDF는 2021~27년 기간 중 80억 유로의 예산으로 혁신적인 방위기술 및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방위 혁신계획(EUDIS)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EU는 좀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며 강력한 방위 분야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약생산지원법(ASAP)」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00만 발의 포병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제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전략(EDIS)은 EU 최초의 방위

산업 전략으로, 회원국들이 '더 많이, 더 잘, 함께, 유럽에 투자'하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유럽안보행동계획(SAFE)은 무기 공동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기존 EU 차원의 어떤 기금보다도 규모가 크다. 또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EU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동 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DIP은 유럽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EDTIB) 경쟁력 및 대응력 강화, 방위 제품의 적시 가용성 및 공급안보 향상, 우크라이나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DTIB)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물자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EU의 방산시장은 분절화(fragmentation)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27개 회원국이 각기 다른 조달 체계와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유럽적 조달 시장이 조성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그 결과 2023년 6월 현재 EU 회원국의 무기는 76%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압도적이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는데, EU는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역내 방위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EU는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 우주 기반 시스템과 같은 파괴적 방위 기술이 전장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위 기술 분야로 신속히 도입하는 스피논(spin-on) 개발 방식을 강조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첨단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39년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등 10대 전략기술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K-방산 수출펀드' 조성 및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대량 생산 능력, 빠른 납기, 가격 대비 높은 성능,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 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다만 첨단 분야의 핵심 기술 보유 수준이 최고 선진국 대비 82%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핵심기술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정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U가 적극적으로 자체 방위역량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고, 특히 역내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동 조달에 있어서 유럽산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유럽 수출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과 EU의 방위산업 강점이 결합될 때 기대되는 시너지도 무시할 수 없다. EU는 첨단기술 우수성에서, 한국은 생산역량과 합리적 가격에서 각각 강점이 있다. 또한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방위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기존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대상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보수·운영(MRO) 및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Made in Europe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산 기업은 동유럽 국가별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여 그 역할을 차별화해야 한다. 폴란드는 전차 및 자주포 조립과 정비 중심지로, 루마니아는 포병 탄약 및 부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여 수평적 공급망 형성을 통해 EU 전역에서 지속적인 주문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상호 절충교역(Off-set) 체계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결합한 모델을 설계하여 EU 시장 내 지속가능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절충교역 인정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국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를 차단하는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한국의 방산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기술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적·조건부 기술 이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현지 기업과의 장기 계약 체결은 물론 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EU 공급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첨단 R&D 공동 개발이다. AI, 우주, 사이버 등 양측이 공통으로 중시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분야에서 공동 R&D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야 한다. 한-EU 공동 방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투자 방식으로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EU 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정찰위성, 군용 PNT(위치·항법·시간), AI 전장 실험 등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은 AI 기반 전투관리체계나 드론 군집 운용 등에서 EU 기업과 다자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공동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구성 및 방법 17

제2장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 18

 1. 유럽 방산정책의 진화 18

 가. EU 안보 및 방위 분야 전략적 접근 18

 나. 주요 방위 관련 프로그램 19

 2. 러-우 전쟁 이후 방산 조달 및 산업 전략 변화 25

 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26

 나. 방위산업 관련 주요 전략 및 정책 27

 다. 방위비 증액 29

 3. EU 방위산업 백서 및 후속 조치 33

 가. EU 방위산업 백서 33

 나. 유럽 방위산업 옴니버스 패키지 41

 다.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42

 라. 역내 방위 제품 이전 및 조달 관련 지침 45

 마. 군 기동성(Military Mobility) 규정 49

제3장 EU 방산시장 구조와 산업 생태계 51

 1. EU 방산시장 51

 가. EU 방산시장 평가 51

나. EU 방산 분야 주요 수출입	55
2. 방위산업 생태계: 주요국의 방산 기업 및 클러스터	61
가. EU 개관	61
나. 주요국 방위산업 기업 및 클러스터	63
3. EU 방산시장의 변화: M&A와 혁신	69
가. EU 방위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M&A 확대	69
나. EU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	71
다. EU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	76
제4장 한-EU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	78
1. 한국의 방산수출 주요 정책	78
가. 방산수출 전략	78
나. 국방기술기획서(2025~39년)	79
다. 세제 및 자금지원	81
라. 민군 방위기술협력 정책	83
마. 국방혁신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	85
2.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 협력 가능성	86
가.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86
나. 협력 가능성 평가	91
제5장 결론	95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95
가. 연구 주요 내용	95
나. EU 방위산업 전략 및 정책 평가	100

2. 한-EU 방산협력 정책 제언	105
가.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	105
나. 전략적 상호 절충교역(Offset) 체계 구축	107
다. 한-EU 첨단 R&D 공동개발 프로그램 시행	108
참고문헌	111
Executive Summary	121



표 차례

표 2-1.	2025년 EDF 33개 프로젝트 이슈	23
표 2-2.	EU 방위혁신 관련 주요 프로그램	24
표 2-3.	EU SAFE의 2개 범주	38
표 2-4.	EU SAFE 자금 할당 결정	38
표 3-1.	전 세계 무기 수출	57
표 3-2.	글로벌 10대 방산 수출국의 주요 수출계약 건수(2024년 이후) ..	57
표 3-3.	2020년 이후 FMS를 통한 50억 달러 이상 무기 구매	59
표 3-4.	EU 회원국별 무기 수입 규모(2020~24년)	60
표 3-5.	EU 상위 10대 방산기업 매출(2024년)	63
표 4-1.	국방혁신기업 선정	86
표 4-2.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2020~24년)	89
표 4-3.	한국의 대EU 회원국 무기 수출: 품목별 수주물량(2020~24년) ..	90
표 5-1.	EU 방위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95
표 5-2.	연구 결과: 주요 핵심 주제 및 내용	99
표 5-3.	핵심원자재와 첨단 방위 시스템 및 장비 제조	103



그림 차례

그림 2-1.	2010년대 이후 EU의 방위안보 정책	19
그림 2-2.	EU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2023년 vs 2024년)	30
그림 2-3.	EU의 방위비 지출 및 군사장비 지출	31
그림 2-4.	NATO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 부분별 비중(2025년)	32
그림 2-5.	방위산업 자금 조달에서 EU의 역할	40
그림 2-6.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거버넌스	44
그림 2-7.	2025년 군 기동성 패키지: 문제점, 목표 및 조치	50
그림 3-1.	EU의 군사 장비별 수입 의존도	55
그림 3-2.	프랑스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65
그림 3-3.	독일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67
그림 3-4.	이탈리아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69
그림 3-5.	유럽 방위기술 스타트업 1위 기업의 펀딩 비중	76
그림 4-1.	국방기술 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	80
그림 4-2.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84
그림 4-3.	한국의 10대 무기체계 유형별 기술수준 변화	87
그림 4-4.	한-EU 방산협력의 SWOT	94
그림 5-1.	EU SAFE와 다른 방위 관련 기금 규모	97
그림 5-2.	2024년 EU 및 회원국별 재정수지와 모스크바로부터의 거리 ..	100



약어 표기

약어	영문	국문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
ASAP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	탄약생산지원법
C4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s	지휘통제통신컴퓨터
CARD	Coordinated Annual Review on Defence	조정 연례 방위 검토
CDM	Capability Development Mechanism	역량개발메커니즘
CDP	Capability Development Plan	역량개발계획
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공동외교안보정책
CPoA	Common Procurement of Artillery Ammunition	포병탄약공동 조달
CAVS	Common Armoured Vehicle System	핀란드-라트비아 주도 공동장갑 차시스템
DEF	Defence Equity Facility	방위자산펀드
DEFIS	DG for Defence Industry and Space	방위산업·우주총국
DIANA	Defenc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	북대서양 방위혁신 엑셀러레이터
DIRB	Defence Industrial Readiness Board	방위산업 준비태세 위원회
EDA	European Defence Agency	유럽방위청
EDF	European Defence Fund	유럽방위기금
EDIRPA	European Defence Industry Reinforcement Through Common Procurement Act	공동 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규정
EDIDP	European Defence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	유럽방위산업개발프로그램
EDIP	European Defence Industrial Programme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
EDIS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유럽방위산업전략
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유럽대외관계청
EMERS	European Military Mobility Enhanced Response System	비상대응 강화
EPF	European Peace Facility	유럽평화기금
ESA	European Space Agency	유럽우주청
EUDIS	EU Defence Innovation Scheme	EU 방위혁신계획

약어	영문	국문
EUDTIB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
EUGS	EU Global Strategy	EU 글로벌 전략
EUMS	European Union Military Staff	EU 군사참모부
EU MSM	EU Military Sales Mechanism	EU 군사판매 메커니즘
FAST	Fund to Accelerate Supply Chain Transformation	방위 공급망 전환 가속화 기금
FMS	Foreign Military Sales	미국 대외군사판매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위성항법시스템
GTLs	General Transfer Licences	일반이전라이선스
HEDI	Hub for European Defence Innovation	유럽방위혁신허브
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IBCS	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	통합 전투지휘 시스템
ISAE-SUPAERO	Institut Supérieur de l'aéronautique et de l'espace	고등항공우주연구소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 감시 및 정찰
ISTAR	Intelligence, Surveillance, Target Acquisition and Reconnaissance	정보, 감시, 표적 획득 및 정찰
MALE UAVs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Unmanned Aerial Vehicles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유지보수·관리·운영
MLU	Mid-life Upgrade	중도개량업그레이드
MMSC	Multi-mission Surface Combatant	다목적수상전투함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OCCAR	Organisation Conjointe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armement	합동무장협력기구
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상설구조화협력
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위치·항법·시간정보

약어	영문	국문
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안보행동
SAMP/T	Surface-to-Air Missile Platform/Terrain	지대공미사일플랫폼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
SDA	Space Domain Awareness	우주영역인식
SDI	Strategic Dual-use Infrastructure	전략적 겸용 인프라
SEPV3	System Enhancement Program version 3	시스템 향상 프로그램 버전 3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소나
TIVs	Trend Indicator Values	추세지표값
UGV	Unmanned Ground Vehicle	무인지상차량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1. 연구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EU의 방위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물론 방위역량의 강화 또는 자체방위군 설립 등 방위안보 분야에서 EU의 독자적인 정책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¹⁾ 이렇듯 EU 안보 분야의 통합 수준이 경제나 금융에 미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EU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치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즉 EU의 통합논의는 초국가주의(supranationalism)와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가 경쟁하는 가운데 회원국 고유권한, EU와 회원국 공유 권한, EU 공동체 고유권한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 방위안보 분야는 회원국과 EU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EU가 주도권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제도적·정치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²⁾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지형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서 국가 간 전면전이 발생한 것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과도한 NATO 의존을 비판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대서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EU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

1) EU 차원의 집단방위 관련하여 1950년대 유럽방위공동체(EDC: European Defence Community)가 추진되었으나, 프랑스의 비준 실패, 대서양 동맹, 독일 재무장 우려 등으로 실패함.

2) EU 통합이론에서 초국가주의는 유럽통합을 국가 간 협상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으로 Moravcsik(1993)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에 근거함. 반면 초국가주의는 국가 간 협력이 개별국가가 아닌 초정부 기관이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론으로 Haas(1958)의 신기능주의에서 주장하고 있음.

액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NATO 차원의 유럽에 대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EU를 압박했다. 2024년 말 기준 EU의 방위비 지출이 3,260억 유로로 GDP 대비 약 2% 수준을 기록했으나, 트럼프는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EU 차원의 대응은 쉽지 않았다.³⁾ 지난 2021~24년 기간 중 30%가 넘는 방위비 지출 증액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2024년의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은 약 1%p 증가했다는 점에서 5%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EU 역내의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자체적인 방위안보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U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3월 2030년의 유럽 방위역량 강화를 목표로 방위산업 백서를 발표했는데, 방위역량 및 회원국의 구매력 강화, 회원국 간 협력적 상호 운용 증진이 제안되었다. 무엇보다 EU 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부문의 역내 단일시장 구축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의 방위산업 백서는 공동 조달 및 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EU가 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기업의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모두 EU 회원국이며, EU가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조달에서 EU 역내산 비중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방산기업은 그동안의 수출성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향후 대EU 수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정책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EU의 주요 무기수출입 비중 분석, EU 역내 대표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의 대EU 수출 경쟁력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EU 간 협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시절 EU에 “NATO 방위비 분담금이 GDP 대비 2%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함. 오태현(202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 연구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연구 배경을 소개하고, 2장에서는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러-우 전쟁 이전에 발표된 EU 공동체 차원의 방위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러-우 전쟁 이후 본격화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특징을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2025년 중에 발표된 EU의 재무장 정책과 자금지원 정책인 유럽안보행동(SAFE),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역내 방위 제품 이전 및 조달 관련 지침 개정안, 군 기동성 등이 있다. 3장에서는 유럽 방산시장 및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EU 전반의 방산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요 방산기업과 방위산업 생태계를 살펴본다. 또한 EU 방위산업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M&A 성과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주요 방위산업 분야 혁신기술 개발 추진 현황을 분석한다. 4장은 한국과 EU의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방산수출 정책과 방산 경쟁력, 그리고 한국과 EU 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무기별 수출 비중과 주요 수출대상국을 특정하기 위해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 요약 및 평가 후 한국과 EU 간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성 분석과 함께 주요 담당자 및 방위산업 분야 EU 측 전문가와 유럽 방산기업 관계자의 면담을 진행했다.⁴⁾ 이를 통해 EU 정책 내용의 의미와 향후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EU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EU의 방위산업 역량 및 EU 역내 공급망 강화, 나아가 한-EU 방산협력 가능성 검토를 위한 분석 기준으로 활용한다.

4) 방위산업 EU 측 전문가(브뤼셀, 파리 및 로마) 및 국내 진출 유럽 방산기업 관계자 면담은 참고문헌 참고.

1. 유럽 방산정책의 진화

가. EU 안보 및 방위 분야 전략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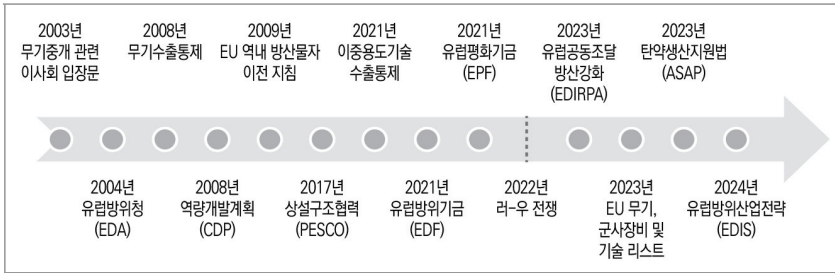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접근은 초국가주의보다 정부간주의에 따른 EU 회원국의 자율에 기초하고 있다.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은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을 통해 EU의 3개 기둥(유럽공동체, 공동외교안보정책, 형사 분야 및 사법 협력)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⁵⁾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외교정책과 안보(방위 포함)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와 회원국 간 체계적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교·안보·방위 부분은 회원국들의 정부간주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와 방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은 물론 집행위원회도 안보 및 방위에 있어서 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상설 기구도 부재했으며, 외무장관 회의와 같은 정부 기관 간 회의가 그나마 부분적인 역할을 해왔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은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공동체 예산과 각국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분담금 배분 과정에서 공동체 절

5) 세 번째 기둥인 형사 분야 및 사법 협력은 첫 번째 기둥인 유럽공동체로 편입되어 공동외교안보정책만 EU 조약에서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

차와 정부 간 절차가 서로 다르다 보니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방위 및 안보 관련 정책은 꾸준히 제안 및 시행되고 있다.⁶⁾

그림 2-1. 2010년대 이후 EU의 방위안보 정책



자료: Mejino-Lopez and Wolff(2024), "A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in a hostile world," p. 8.

나. 주요 방위 관련 프로그램

1) 상설구조화협력(PESCO)

EU는 2017년 12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따라 회원국들이 더 긴밀하게 방위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설구조화협력(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을 제안했다.⁷⁾ 리스본 조약에 첨부된 의정서 10호에 근거하여 몰타를 제외한 26개 EU 회원국이 PESCO에 참여하고 있으며,⁸⁾ 고도로 모듈화된 구조를 통해 소규모의 다양한 그룹이 개별 방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⁹⁾ PESCO에 대한 참여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국의 주권이나 안보 및 방위 정책을 침해하지 않는다.

6) 전해원(2023)에 따르면, 러-우 전쟁 이전에는 영국, 노르웨이 및 EU 회원국 간 상이한 전략문화가 존재했음. 국가 위상 추구(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헝가리, 포르투갈), 국제 협상 기반(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국가 권력 보호 및 투사(NATO를 선호하는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와 EU를 선호하는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로 분류됨.

7) European Union(2017), "Council Decision(CFSP) 2017/2315 establishing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PESCO) and determining the list of participating Member States."

8) PESCO 출범 당시 덴마크와 몰타는 불참했으나, 2023년 덴마크의 PESCO 참여가 공식적으로 결정됨.

9) PESCO, "About PESCO"(검색일: 2025. 10. 1.).

PESCO 참여국은 5개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이행을 약속했으며,¹⁰⁾ 현재 PESCO에는 7개 분야에서 75개의 방위 프로젝트가 개발 중에 있다.¹¹⁾ 각 프로젝트는 다양한 PESCO 참여국에 의해 추진되며, 하나 이상의 PESCO 참여국에 의해 조율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프로젝트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참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한편 PESCO는 2020년 이사회 결정을 통해 제3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을 발표했다.¹²⁾ 제3국은 PESCO 프로젝트 조정자에게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¹³⁾ 이때 프로젝트 구성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의 참여 범위, 형식 등을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참여 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PESCO에 참여하는 제3국은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체결한 약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유럽방위기금(EDF) 및 유럽방위혁신계획(EUDIS)

2021~27년 기간 중 80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된 유럽방위기금(EDF: European Defence Fund)은 회원국 내 기업들이 혁신적인 방위기술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 방위 프로젝트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1~27년 기

-
- 10) a. 리스본 조약 발효일로부터 방위 장비에 대한 투자 지출 수준에 관한 승인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안보 환경과 연합의 국제적 책임에 비추어 이러한 목표를 정기적으로 검토.
 b. 가능한 각국의 방위장비를 서로 일치시킴. 특히 각국의 군사적 필요사항을 조화롭게 파악하고, 방위수단과 역량을 통합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화하고, 훈련 및 물류 분야에서의 협력 장려.
 c. 특히 병력 투입에 관한 공통 목표를 식별하고 국가적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병력의 가용성, 상호운용성, 유연성 및 배치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이행.
 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침해하지 않고 다국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역량 개발 메커니즘의 틀에서 인지되는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동 노력.
 e. 적절한 경우 유럽 방위 기구의 틀 안에서 주요 공동 또는 유럽 장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 11) 7개 프로젝트 분야: 훈련 및 시설, 해양, 사이버 및 C4ISR, 전략적 지원 및 증강, 지상·지형 및 시스템, 공중 및 시스템, 우주. European Council(2025. 5. 27.), "EU defence readiness: Council launches 6th wave of new PESCO projects"(검색일: 2025. 9. 1.).
- 12) European Union(2020), "Council Decision(CFSP)2020/1639 establishing the general conditions under which third States could exceptionally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individual PESCO projects."
- 13) PESCO에 참여하는 비EU 국가: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영국.

간 중 34개의 주제별 및 수평적 범주로 구성된 연간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는 유럽방위기금은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며,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기관에 위탁관리 하도록 했다. 유럽방위기금 중 53억 유로는 회원국별 기여금을 보완하는 협력적 역량 개발 프로젝트에, 27억 유로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적 방위 연구에 배정되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25~27년 기간 중 유럽방위기금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¹⁴⁾ 이는 회원국은 물론 준회원국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역량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한다. 2025년 1월에 공개된 동 자료는 구속력이 없는 지표 성격으로 매년 개정될 예정이다. 일단 16개 범주별 지표 계획에 따르면 아래와 같으며, 특히 정보우위, 공중전, 지상전, 해상 및 해저전에 각각 EDF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이 배정된다는 점에서 동 분야의 방위역량에 대한 EU의 정책적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 [국방 의료 대응, CBRN, 생명공학 및 인적 요인] CBRN(화학·생물·방사능·핵) 위협을 탐지·식별·모니터링, 혁신적인 제독 방법, CBRN 관련 데이터 네트워킹 및 자동화, 의료적 대응 수단 개발에 중점을 둠. 2023년에 출범한 유럽 국방 의료대응수단 연합은 CBRN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년간 R&D 계획 수립
- [정보우위] EDF 예산의 10% 이상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4(지휘, 통제, 통신 및 컴퓨팅), ISTAR(정보, 감시, 표적 획득, 정찰) 및 합동 전자전 분야에서 EU 역량 강화
- [첨단 수동 및 능동 센서] 국방, 우주, 민간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로 분류되는 센서로, 레이더,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와 같은 능동 센서 및 수동 레이더, 적외선 센서와 같은 수동 센서 개발
- [사이버] 사이버 방어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장려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

14) European Commission(2024a), "European Defence Fund - Indicative multiannual perspective 2025-2027."

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사이버 대응 작전을 위한 가능 역량 및 전 범위 사이버 방어 작전과 일치

- [우주] EDF 예산의 10% 이상이 할당되며,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우주 기반 데이터 및 역량에 중점을 둠. ISR 지구 관측, 우주 영역 인식(SDA: Space Domain Awareness), 미사일 조기경보, 위치·항법·시간정보(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및 NAVWAR, 보안 위성 통신 등이 주요 대상
- [디지털 전환] AI 및 자율 시스템의 핵심 기술, 국방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범분야 기술에 초점
- [에너지 복원력 및 환경 전환] EDF 예산의 5% 이상이 할당되며, 국방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과 녹색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효율적인 엔진, 환경 전환에 역점
- [재료 및 부품] 군사역량 개발의 핵심인 솔루션을 위한 재료 및 부품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략적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 강화 중요
- [공중전] EDF 예산의 10% 이상이 할당되며, 유인 및 무인 플랫폼의 조합, 센서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전투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둔 차세대 전투기 및 헬리콥터 시스템 개발
- [항공 및 미사일 방어] 대무인 항공 시스템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역량 포함
- [지상전] EDF 예산의 10% 이상 할당되며, 주요 지상전 시스템, 무인 지상 시스템 및 간접화력에 중점
- [병력 보호 및 이동성] 모든 작전 수준에서 병력 보호와 이동성을 보장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급보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 [수중전] 수중 위협 대응 능력 확보와 핵심 해저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해저전 활동 포함함. 기뢰전, 대잠수함전 및 해저전, 상황 인식 등이 주요 대상
- [시뮬레이션 및 훈련] 준비 태세와 상호운용성 제고 목표
- [파괴적 기술] 방위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지원

표 2-1. 2025년 EDF 33개 프로젝트 이슈

(단위: 백만 유로)

분류	프로젝트 주제	예산
방위 의료 지원, CBRN, 바이오기술	• 군사 의료 대항조치 동맹-R&D(R)+(D) • 자율 분류 및 후송(R)	35
정보우위	• 유럽 다기능 정보확산 시스템(R)	39
첨단 센서	• 다중 대역 4D 레이더 기술(D) • 적외선 탐지(D)	58.5
사이버	• 군사작전 시 자율주행차의 위험, 견고성 및 회복력(R) • 사이버 방위작전 역량(D)	54
우주	• 궤도 내 작전 및 서비스(D) • 우주 기반 ISR(D)	115
디지털 전환	• 프라이버시 보호형 인간-AI 대화체계(R)	27
에너지 회복력 및 환경	• 차세대 로봇 추진 시스템(R) • 해군 하이브리드 추진 및 동력 시스템(R) • 항공기 추진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R)	103
재료 및 부품	• 국방 애플리케이션용 칩셋	25
공중전	• 협력 공중 전투(D) • 개선된 조종사 환경(D)	103
지상전	• 대포병 능력 기술(R) • 미래 모듈형 다기능 지상 플랫폼 및 친환경 기술(R) • 공중-지상 포함 지상협력 전투(D) • 드론 기반 저가 대량 탄약(D)	192
병력 보호 및 이동성	• 차세대 병사 시스템을 위한 실물 크기 시연기(D)	35
해상전	• 디지털 함선 및 해군 전투 클라우드(D)	54
수중전	• 스탠드오프 대잠수함전 교전(R) • 첨단 수중 네트워크(D)	45
시뮬레이션 및 훈련	• 항공 시스템을 위한 다학제 설계 및 분석 프레임워크(R) • 실시간 가상훈련 상호운용성(R)	43
파괴적 기술	• 심해 지원 기술(R) • 파괴적 기술을 목표로 하는 비주제 연구 활동(R)	43

주: (R)-연구 활동, (D)-개발 활동.

자료: European Commission, "EDF Calls for Proposals 2025"(검색일:2025. 9. 10.).

매년 프로젝트 신청을 받고 심사 후 예산을 배정하는 유럽방위기금은 2025년에는 5차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10억 6,500만 유로가 할당되었다.

한편 유럽방위기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EU 방위혁신계획(EUDIS: EU Defence Innovation Scheme)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 방위청(EDA: European Defence Agency)이 운영하고 있는 유럽방위혁신허브(HEDI: Hub for European Defence Innovation) 및 NATO에서 운영되는 DIANA(Defenc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와 함께 유럽을 대표한다.

표 2-2. EU 방위혁신 관련 주요 프로그램

구분	EU		NATO
	EU 집행위원회	EU 방위청(EDA)	
수단	EU 방위혁신계획(EUDIS)	유럽방위혁신허브(HEDI)	북대서양방위혁신 액셀러레이터(DIANA)
거버넌스	EU 집행위원회 방위산업우주총국(DEFIS)	정부 간 회의	NATO 회원국 간 회의
기금	유럽방위기금 공공 및 민간 투자 회원국 기여	배정예산 부재 EDA 운영예산	NATO 회원국 분담금 자발적 기여금
신청 자격	유럽 및 노르웨이 SMEs 및 스타트업	스타트업 및 SMEs	NATO 회원국 내 기업 스타트업 및 SMEs
연간 예산	연간 2억 8,600만 유로	연간 6만 유로	연간 6,700만 유로

자료: Möhring(2024), "EUDIS, HEDI, DIANA: What's behind three defense innovation acronyms?" p. 5.

유럽방위혁신계획은 총 14억 6,000만 유로를 유럽방위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4억~5억 유로는 다른 공공 및 민간 자금으로부터 조달한다. 유럽방위혁신계획은 방위 해커톤(Hackathons), 혁신 테스트 허브, 민간 연구의 군사적 적용, 비즈니스 코칭 등 다양한 R&D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럽방위기금이 혁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면, 유럽방위혁신계획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수단이 된다.¹⁵⁾ 2025년에는 총 3억 3,660만 유로가 투자되는데,

15) EU 방위 해커톤(Defence Hackathon)은 방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구하는 인식 제고 및 홍보 이벤트임. 개인들이 모여 팀을 구성, 제한된 시간에 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솔루션을

인공지능(AI)의 기술적 과제, R&D에서 우주, 에너지 회복력, 지상전, 사이버전 분야에서 시너지 촉진 연구,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우크라이나 기업 지원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3)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2016년 11월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EU 글로벌전략(EUGS: EU Global Strategy)을 통해 EU는 매년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Coordinated Annual Review on Defence)에 대한 범위, 방식, 내용을 제안하도록 요청했다. 조정 연례 방위 검토는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방위협력을 심화하며, 방위지출 계획의 일관성을 포함한 최적의 활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CARD는 회원국의 투명성, 정치적 가시성 및 헌신을 바탕으로 확인된 역량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유럽방위청(EDA)은 유럽대외관계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과 협력하여 CARD의 주요 요소를 정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2017년 5월 CARD 구축 방안이 승인되었고, 2017년 가을부터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2. 러-우 전쟁 이후 방산 조달 및 산업 전략 변화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EU의 통합 수준은 경제 부문과 비교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EU 기능조약 제346조 따르면 회원국이 자국의 본질적

투선을 제공하는 것임. 해커톤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자들에게 방위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에 개최된 제2회 해커톤에서는 우주 자산 보호, 방어를 위한 우주, 소버린 항공기 등 세 개의 챌린지가 제기됨. 자세한 내용은 EUDIS, "Defence Hackathons: Put your innovative ideas to the challenge"(검색일: 2025. 9. 30.) 참고.

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EU 차원의 통합 논의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는 군사안보에 있어 큰 변화를 맞이했다.

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방위 부문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22년 상반기 프랑스가 EU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부터다.¹⁷⁾ 2022년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은 EU의 역량, 회복력, 연대 증진을 위한 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¹⁸⁾ 이때 전략적 자율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전략적 자율성은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적용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¹⁹⁾ EU 이 사회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전략적 자율성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가능한 경우 파트너와 함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다.²⁰⁾ 러-우 전쟁 이후 채택된 전략적 나침반은 EU의 대응 조치의 지침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2024년 한해 200억 유로 이상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EU 신속배치능력 등이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EU의 사이버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며,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모든 전략적 영역에서 회복 탄력성과 역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협을 예측하고 감지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

16) European Commission(2025a), “White Paper on EU defence.”

17) 전략적 자율성은 1950년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후 군사 및 방위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EU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용커 전 EU 집행위 원장이 국정연설(Statement of the Union)에서 EU의 글로벌 전략을 통해 경제 및 통상 분야로 확대됨. Grevi(2016), “A Global Strategy for a soul-searching European Union.”

18)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22),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19) European Council(2022, 3. 31.), “A Strategic Compass for a stronger EU security and defence in the next decade”(검색일: 2025. 8. 23.).

20) Torreblanca(2023), “Onwards and outwards: Why the EU needs to move from strategic autonomy to strategic interdependence.”

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여전히 방위역량에서 EU가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방위 부문에서 EU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유럽의 미국 방위 산업 기반 구매가 급증했는데, 이러한 의존도는 방공, 미사일, 전투기 등 첨단 장비와 구매에 포함된 추가 장비 및 서비스에서 모두 확인된다.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이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미국이 EU와의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NATO나 미국이 없는 EU 방위안보는 단기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EU는 이제 방위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역량 강화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하에서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방위 산업 강화 전략 및 주요 정책을 분석한다.

나. 방위산업 관련 주요 전략 및 정책

1) 탄약생산지원법(ASAP)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나선 EU는 2023년 3월 5억 유로 규모의 「탄약생산지원법(ASAP: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을 발표하고,²¹⁾우크라이나에 향후 12개월 동안 100만 발의 포병 탄약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접근 방식에 합의했다. 우선 기존 재고 및 주문의 재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상 공격 및 포병 탄약과 미사일을 긴급 지원한다. 다음으로 회원국들이 공동 조달을 통해 미사일 및 탄약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EU 방위산업의 제조 역량 확대를 지원하고 공급망 확보 및 효율적인 조달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21) European Union(2023), "Regulation(EU) 2023/1525 on supporting ammunition production (ASAP)."

방안을 모색한다.

EU ASAP는 유럽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EDTIB: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면서 지상기반 및 포병 탄약과 미사일의 적시성 높은 공급을 목표로 한다. ASAP의 지원 대상은 해당 공급망 교란을 개선하고 관련 방위 제품의 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역량 확대(특히 생산 능력 증대 및 생산 리드타임 단축), 국경 간 협력, 예비 생산 역량 확보, 재정비 및 인증, 인력 양성 등이다. 자금조달은 적격 비용의 최대 35%를 지원하고 부품이나 원자재 생산 역량에 있어서는 최대 40%까지 지원된다. 또한 제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가 더 지원된다.²²⁾

ASAP는 관련 방위 제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조달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우선 허가절차의 신속화다. 회원국은 관련 방산 제품의 생산 시설 계획, 건설·운영, 최종 제품의 인증을 위한 행정 신청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회원국이 환경, 보건, 안전 문제와 관련된 EU 법률을 포함하여 방위 관련 면제조항을 개별 사례별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공동 조달이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지침이 정하고 있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울 때, 2025년 6월 30일까지 임시 조달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2)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2024년 3월 EU 집행위원회와 외교관계 고위대표, 그리고 유럽방위청(EDA)이 공동으로 EU 최초의 방위산업전략(EDIS: European Defence Industry

22) Article 9조.

- (a)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에 설립된 기업 간 새로운 국경 간 협력에 기여한 것이 입증.
- (b) 다음 중 하나에서 발생하는 주문에 대해 조치 기간 동안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 최소 3개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에 의한 방위 제품의 조달, 우크라이나 이전할 목적으로 최소 1개 회원국이 관련 방위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 (c) 수혜자가 회원국 또는 관련 국가에 설립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거나 컨소시엄 참가 수혜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Strategy)을 발표했다.²³⁾ 이는 무엇보다도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EU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회원국의 투자 확대,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체 차원의 전략 필요성에 기인한다. 러-우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 첨단 전쟁 양상이 혼합되어 있어, 방위 장비 전 분야의 신속한 대규모 개발 및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EDIS는 EU 방위 대비 태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럽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EDTIB)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한다. EDTIB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투자 부족과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의 분열로 인해 그 잠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 6월까지 EU 회원국 방위 제품의 78%가 EU 외부에서 수입되었으며, 이 중 미국이 63%로 압도적이다. 이는 2007년 EU 회원국들이 전체 방위 장비 예산의 35%를 유럽 공동 방위장비 조달에 지출하기로 한 합의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이런 배경으로 EDIS는 회원국들이 ‘더 많이(more), 더 잘(better), 함께(together) 그리고 유럽(Europe)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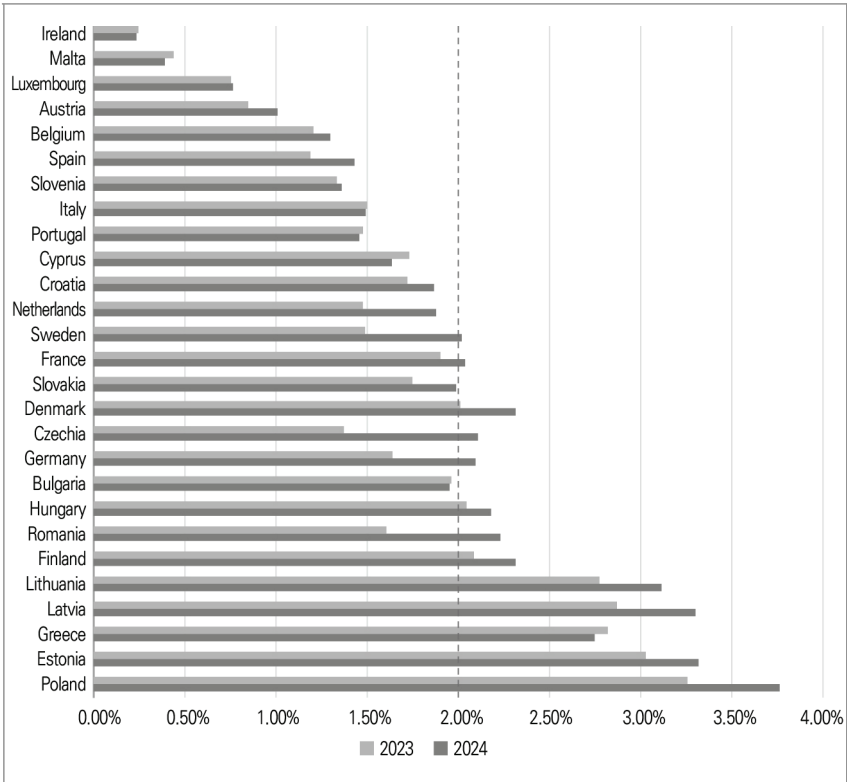
다. 방위비 증액

2024년 EU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430억 유로로 10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81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EU의 방위비 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2021년 대비 2024년의 방위비는 37%나 증가했다. 이는 EU 전체 GDP의 1.9%로 2023년의 1.6%보다 0.3%p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3) European Commission(2024b), “A New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Achieving EU readiness through a responsive and resilient European Defence Industry,” JOIN(2024) 10 final.

그림 2-2. EU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2023년 vs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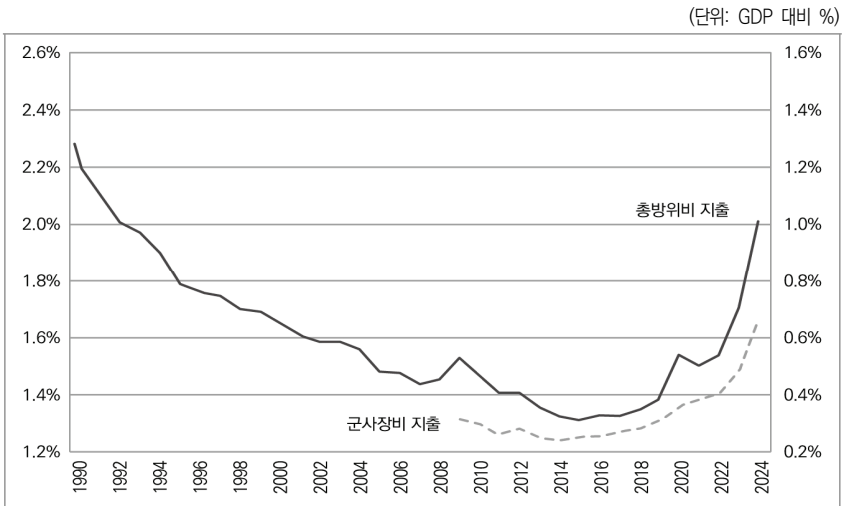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pean Defence Agency(2025), "Defence Data 2024-2025," p. 5.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14개 회원국은 GDP 대비 2% 미만을 기록한 반면, 다른 13개 회원국은 이를 초과했다. 이는 2022년 5개국, 2023년 8개국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회원국 중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방위비는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다.

그림 2-3. EU의 방위비 지출(좌) 및 군사장비 지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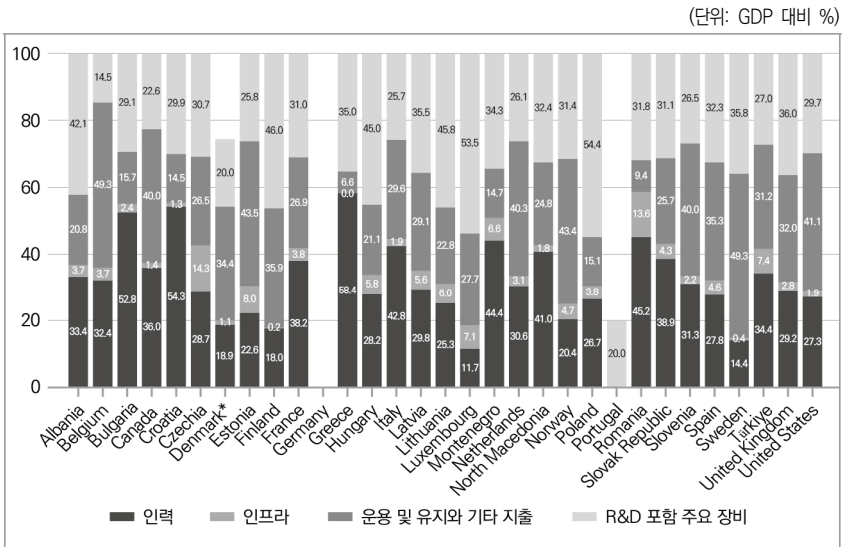


자료: Mejino-Lopez and Wolff(2024), "A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in a hostile world," p. 3.

EU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증액은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 대륙 내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1인당 방위비 지출의 경우에는 2024년 764유로로 전년 수준(642유로)을 상회하고 있으며, 병력 1인당 방위비 지출은 2024년 24만 9,000유로로 10년 전 수준(13만 8,000유로)보다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방위비 지출을 살펴보면, 방위비 지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방위 부문 투자는 2024년 1,060억 유로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유로를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지면서 방위 부문 투자가 1,3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방위 부문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비 조달 규모는 2024년 2023년 대비 39% 증가한 880억 유로를 기록했다. 한편 방위 부문 R&D는 2024년 전년대비 20% 증가하며 130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2025년에는 170억 유로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4. NATO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 부분별 비중(2025년)



자료: NATO(2025), "Defens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2014-2025)," p. 6.

또한 방위비 관련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025년 6월에 있었던 NATO 정상회의에서 NATO 내 스페인을 제외한 EU 회원국이 2035년까지 GDP 대비 5%에 이르는 방위비 지출 증액에 합의했다는 점이다.²⁴⁾ 2014년 NATO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이 합의된 지 무려 10여 년 만에 3%p 증가한 것이다. NATO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 제기된 사안이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NA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거세졌다. 2025년에 합의된 방위비 증액은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5%의 핵심방위 역량에 대한 (직접)지출과 1.5%의 중요 방위 인프라, 산업기반 강화 등에 관한 (간접)지출로 구분되어 이행된다. 러-우 전쟁과 중동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24) NATO(2025. 6. 27.), "Defence expenditures and NATO's 5% commitment"(검색일: 2025. 8. 10.).

그러나 NATO 방위비 증액 합의와 관련해서는 EU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동유럽, 발트 국가들은 러시아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2%의 방위비 지출로는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스페인이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프랑스는 NATO 차원의 방위비 증액이 아닌 EU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방위비 증액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연구기관들은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제기하고 있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5%는 정치적인 신호에 불과하며, 지출 방식과 충분한 감독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²⁵⁾ 또한 5%의 방위비 지출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다른 사회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급진 성향의 정당들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²⁶⁾

3. EU 방위산업 백서 및 후속 조치

가. EU 방위산업 백서²⁷⁾

2025년 3월 EU는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위한 새로운 통합버전인 방위산업 백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는 자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유럽 방위태세

25) SIPRI(2025. 6. 27.), "NATO's new spending target: challenges and risks associated with a political signal"(검색일: 2025. 7. 29.).

26) Carnegie endowment(2025. 6. 26.), "Taking the Pulse: Does Meeting the 5 percent of GDP Target Enable Europe to Confront the Russian Threat?"(검색일: 2025. 7. 29.).

27) European Commission(2025a), "White Paper on EU defence"; 오태현(202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축, 회원국 간 효율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방위역량 강화, 회원국 간 무기구매 경쟁 최소화, 회원국의 구매력 제고, 운송 및 우주기반 통신, 항법 및 관측을 위한 겸용(dual-use) 기술 지원, 파트너십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방위역량 강화, 자금조달 계획 및 국제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부정책이 발표되었다.

1) 방위역량 강화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 영역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했다. 방위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 공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지원, 방위역량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회원국의 재원조달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EU 기금 활용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우선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분야로 EU 집행위원회는 7개를 선정했는데, ① 대공 및 미사일 방어, ② 포병 시스템, ③ 탄약 및 미사일, ④ 드론 및 드론 대응 시스템, ⑤ 군 기동성, ⑥ AI·양자·사이버 및 전자전, ⑦ 전략적 공수 지원 및 핵심 인프라 보호 등이다. 대공 및 미사일 방어는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항공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포병 시스템은 정밀 타격 및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며, 탄약 및 미사일은 EU 역내 전략물자 비축 및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드론 및 드론 대응 시스템은 원격으로 제어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무인 기술 및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군 기동성은 EU 역내 및 제3국으로 신속히 군대 및 무기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철도, 항만, 도로 및 공항 등의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회원국 간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AI·양자·사이버 및 전자전은 군사용 AI 및 양자 컴퓨팅 앱을 개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 및 방어 역량을

지원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공수 지원 및 핵심 인프라 보호는 전략항공기, 공중 급유, 해양인지 및 우주자산 등의 인프라에 대한 보호다.

확인된 7개 우선순위 분야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EU 역내 방위산업 부문의 통합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회원국 간 군 동원에 있어서 EU 차원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다. 방위역량 강화는 EU 1개 회원국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EU 공동체 차원의 협조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협력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증가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을 비롯한 EU 차원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달과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및 방위기술의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동 조달을 개발하고 유럽방위청(EDA)이나 합동무장협력기구(OCCAR) 등을 활용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장려한다.²⁸⁾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0월 2030년 방위태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를 발표했다.²⁹⁾ NATO 등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약속한 역량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고,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혁신적인 유럽 산업 및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EU 군사참모부(EUMS: European Union Military Staff)는 회원국들의 역량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는 매년 업데이트되어 유럽방위청이 준비하는 방위에 관한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에 통합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의 역량은 우선적으로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전략적 지원 수단, 포병 시스템, 군사 이동성, 미사일 및 탄약, 사이버·AI·전자전, 드론 및 대(對)드론, 지상 전투, 해상으

28) 합동무장협력기구(OCCAR: Organisation Conjoint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Armement)는 유럽 6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이 참여하는 정부 간 기구로, 다국적 군사 장비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OCCAR, "OCCAR- About Us"(검색일: 2025. 9. 10.).

29) European Commission(2025b), "Preserving Peace-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 JOIN(2025) 27 final.

로 지정하고, 이들 우선 분야의 방위역량에서 역량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기존 중요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 역량 연합(Member States Capability Coalition)을 신속히 결성하도록 한다. 동 연합은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고, ED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27년 말까지 방위조달의 최소 40%를 공동 조달로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EU는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European Drone Defence Initiative), 동부측면 감시(Eastern Flank Watch), 유럽대공방어막(European Air Shield), 유럽우주방어막(European Space Shield)과 같은 주요 플래그십 방위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는 드론에 대한 감지, 추적, 무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대드론 역량과 정밀 타격을 위한 드론 기술 역량을 포함하는 일종의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다. EU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연계를 통해 혁신적 드론 및 대드론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동부 측면 감시는 EU의 동부 국경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육해·공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 말까지 EU 동부 국경 전반을 요새화한다. 유럽 대공방어막(European Air Shield)은 EU 전역의 공중 및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으로, NATO 지휘 및 통제 시스템과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우주방어막은 우주 자산과 서비스를 보호하고 복원력을 확보함으로써, EU의 2030년 국방 대비 태세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2) 자금조달 계획

EU 집행위원회는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8,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계획(일명, 'ReArm Europe Plan')을 제안했다. 동 계획은 EU가 보증하는 대출 형태의 1,500억 유로 규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자금 및 EU 회원국의 재정지출로 6,500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다.³⁰⁾ 특히 SAFE는

무기 관련 공동 조달을 통해 방위역량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시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 조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최소 2개 회원국 이상과 우크라이나, EEA-EFTA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³¹⁾ 단 최근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자산이 적시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에 의한 조달도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동 조달에 참여하는 무기 생산 계약 입찰 자격은 첫째, EU, EEA/EFT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에 설립되고 본사를 둔 기업으로부터 적격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둘째, 유럽 공급망을 우선시하기 위해 무기 비용의 65% 이상이 EU, EEA-EFTA 및 우크라이나에서 기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SAFE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산물자는 범주 1과 범주 2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범주 2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장비 설계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3국 또는 제3국 기관의 장비 사용 제한이 없어야 한다.

30) TFEU Article 122.

1.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e Treaties, the Council,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may decide, in a spirit of solidarity between Member States, upon the measures appropriate to the economic situation, in particular if severe difficulties arise in the supply of certain products, notably in the area of energy.
2. Where a Member state is in difficulties or is seriously threatened with severe difficulti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or exceptional occurrences beyond its control, the Council,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may grant, under certain conditions, Union financial assistance to the Member State concerne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shall inform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decision taken.

31) EEA(European Economic Area): EU 27개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U 27개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표 2-3. EU SAFE의 2개 범주

범주	품목
1	탄약 및 미사일, 정밀 타격 가능한 포병 시스템, 지상 전투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형 드론(NATO Class 1) 및 관련 드론 대응 시스템, 핵심 인 프라 보호, 사이버, 군사 기동성
2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제, 해수면 수중 기능, 소형 드론(NATO Class 2) 및 관련 드론 대응 시스템, 전략적 공수·공중급유·C4ISTAR 시스템 등의 전략적 지원 요소, 우주 자산 보호, 인공지능 및 전자전 관련 제품

자료: European Commission, "Security Action for Europe"(검색일: 2025. 7. 20).

한편 2025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SAFE가 발효된 후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SAFE 자금 요청에 근거하여 총 19개국에 대해 SAFE 자금을 할당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SAFE 자금 중 약 2/3는 상위 5개국에 할당되었는데, 폴란드가 437억 유로로 가장 많은 자금을 할당받았고 이어서 루마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순이다. 이러한 배정 결과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공평한 시스템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³²⁾

표 2-4. EU SAFE 자금 할당 결정

(단위: 유로)

회원국	할당액	회원국	할당액
벨기에	8,340,027,698	헝가리	16,216,720,524
불가리아	3,261,700,000	이탈리아	14,900,000,000
크로아티아	1,700,000,000	라트비아	5,680,431,322
키프로스	1,181,503,924	리투아니아	6,375,487,840
체코	2,060,000,000	폴란드	43,734,100,805
덴마크	46,796,822	포르투갈	5,841,179,332
에스토니아	2,660,932,171	루마니아	16,680,055,394
핀란드	1,000,000,000	슬로바키아	2,316,674,361

32) "Commission allocates two-thirds of EU's €150 billions SAFE defence loans to five countries" (2025. 9. 9.)(검색일: 2025. 9. 29.).

표 2-4. 계속

(단위: 유로)

회원국	할당액	회원국	할당액
프랑스	16,216,720,524	스페인	1,000,000,000
그리스	787,669,283	총합	150,000,000,00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5h), "Communication to the College on the notification to requesting Member States of the allocation of the loan amounts pursuant to Council Regulation 2025/1106," C(2025) 6300 final, p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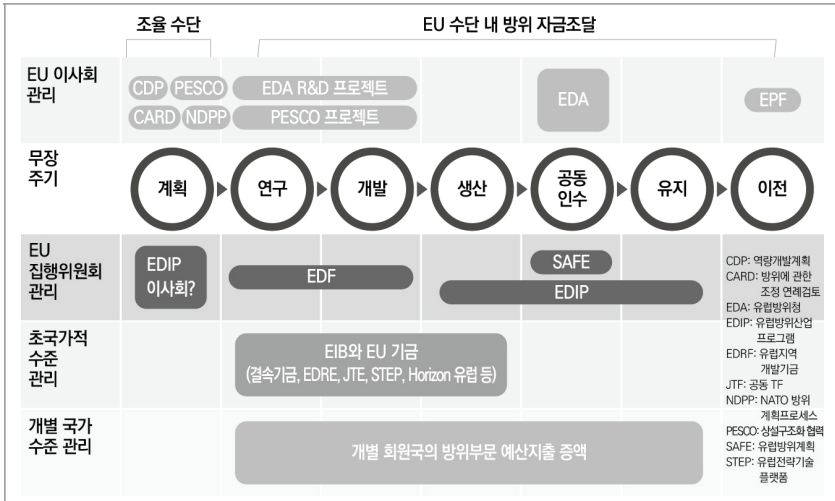
한편 회원국은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EU 회원국의 무기 현대화 및 탄약 비축량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방위지출에 한해 EU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적용을 면제하고, GDP 대비 최대 1.5%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SGP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다재정적자처리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 따라 벌금은 물론 EU 공동체 기금이 활용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실 방위산업에 대한 EU의 자금지원은 2014년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다.³³⁾ 방위 부문은 회원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유럽방위청이 관리하는 EU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예산은 150만 유로에 불과했으나,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3) EU 집행위원회 우주방위총국(DEFIS) 관계자 면담 내용.

그림 2-5. 방위산업 자금 조달에서 EU의 역할

(단위: GDP 대비 %)



자료: Santopinto(2025), "The European Union's Role in Financing the Defence Industry," p. 3.

방위산업에 대한 EU 차원의 수단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크게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의 관리 주체와 자금 출처에 따라서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 초국가적 프로그램, 회원국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초기 조정수단 단계에서는 EU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로, 역량개발계획(CDP: Capability Development Plan), CARD, PESCO, NDPP(NATO Defence Planning Process) 등이 있다. 이후 자금조달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단계에서는 EU 이사회가 관리하는 정부 간 이니셔티브(EDA R&D 프로젝트, PESCO 프로젝트, EDA 구매, 유럽평화기금(EPF) 등이 활용된다. 그리고 초국가적 이니셔티브로는 유럽방위기금(EDF), SAFE,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이 있으며, EU 재무장 계획에 따라 유럽투자은행 및 EU 차원의 기금이 활용된다.

나. 유럽 방위산업 옴니버스 패키지³⁴⁾

2025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방위 준비태세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2030년 까지 EU의 방위산업 역량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입법과정의 단순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기존 재래식 전쟁에 추가적으로 드론이나 AI와 같은 첨단기술이 활용되면서 EU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EU의 정보기관에 따르면 향후 3~5년 이내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서방 국가들의 단결을 시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는 국방백서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한 방위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와 행정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이거나 철폐하기 위한 전반적인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EU 전체적인 방위시장이 회원국들의 무기 구매를 위한 장(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절화되어 있던 시장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통합된 방위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EU 방산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국방조달과 관련하여 국방 및 민간 안보 조달 지침의 적용기준을 90만 유로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낮은 수준의 분절화된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보다 혁신적인 제품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직접 조달은 물론 혁신 파트너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R&D에서 조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34) European Commission(2025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Defence Readiness Omnibus," COM(2025) 820 final.

다.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2025년부터 2027년까지 EU 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조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방위산업 프로그램은 2024년 3월 EU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가 제시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의 다양한 제안들을 시행하게 된다.³⁵⁾ EDIP은 아래와 같이 세 축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은 EU 기능조약상의 개별적 법적 근거에 따라 마련되었다.

첫 번째 축은 EDTIB의 경쟁력 및 대응력 강화(EU 기능조약 173조에 근거), 두 번째 축은 방위 제품의 적시 가용성 및 공급 보장 능력 향상(114조에 근거), 세 번째 축은 우크라이나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의 복구, 재건 및 현대화 기여(제212조에 근거)다. 먼저 첫 번째 축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으로 인한 유럽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럽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EDTIB)이 적응하여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군비프로그램 구조(SEAP: Structures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s) 수립을 추진하는데, 방위 장비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협력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즉시 사용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다. SEAP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원국 관련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가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 2개 이상의 회원국이 회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025년 이후에도 회원국의 공동 조달을 장려하고 EDTIB의 생산투자 지원을 위해 각각 EDIRPA와 ASAP의 논리를 차용한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의 방위 제조 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 및 위험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 운영 프로그램인 방위 공급망 전환 가속화 기금(FAST: Fund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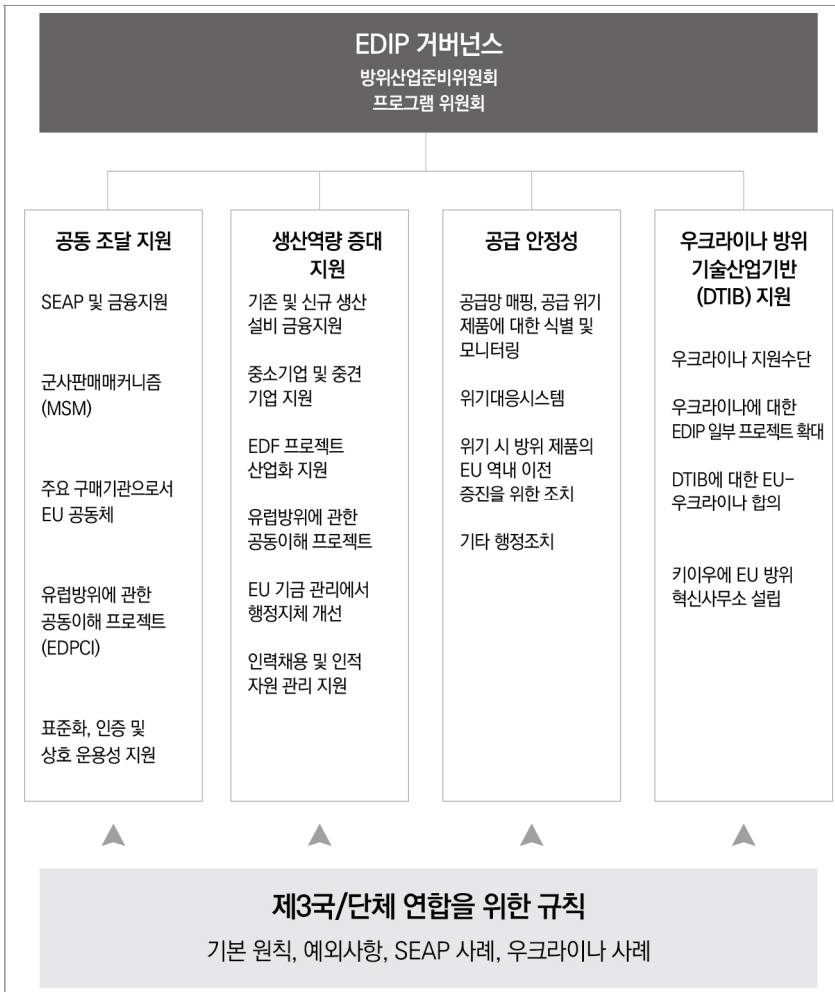
35) European Commission(2024c),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and a framework of measures to ensure the timely availability and supply of defence products(EDIP)," COM(2024) 150 final.

Accelerate Supply Chain Transformation)을 설립한다. 또한 유럽 군사관
매 메커니즘(EU MSM)은 EDTIB에서 개발한 방산물자의 최신 카탈로그를 구
축하고 회원국, 관련 국가 및 우크라이나를 위한 즉각적인 구매/사용/임대 옵션
을 보장하는 방위산업 태세 풀(readiness pool)을 조성한다.

두 번째 축인 방위 제품 공급안보 향상은 유럽 전역에서 공급안보 체제를 구
축하여 회원국의 국경 간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EDTIB에 핵심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일단 공급망 매핑을 통해 EU 안
보 및 방위 이익에 중요한 제품의 공급망을 매핑하고 병목현상 및 제조 역량을
식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을 개발한다. 그리고 공급 중단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목적에서 EU는 조기 경보지표 목록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
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나 안보 관련 공급 위기(security-related supply crisis
state) 시 활용될 위기관리 프레임워크는 관련 정보 수집이나 우선순위 지정 주문
(Priority-rated orders), 그리고 안보 관련 공급 위기 상태 활성화 조치 등
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조달 절차 간소화 및 방산물자 생산에
대한 신속 허가 절차를 적용한다.

세 번째 축인 우크라이나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DTIB: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전제로 전쟁으로 피
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 복구, 재건 및 현대화 지원이다.
EU와 우크라이나 간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NATO 표준에
맞춰 제조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인력 교류, 공동 조달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6.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거버넌스



자료: Santopinto(2024),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of EDIP and European Defence: The Main Proposals on the Table Isolated and Explained," p. 16의 그림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한편 방위산업 준비태세 위원회(DIRB: Defence Industrial Readiness Board)가 출범하는데, 동 위원회는 안보 공급 관련 조치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를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2월 EU 이사회는 EDIP을 공식 채택했다.³⁶⁾ EU 이사회는 공동 조달 활동과 산업 역량 강화 조치를 강조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한 유럽 방위 프로젝트(European Defence Projects of Common Interest)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EU의 안보 및 방위에 있어 필수적인 회원국의 군사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라. 역내 방위 제품 이전 및 조달 관련 지침³⁷⁾

EU 재무장 계획 및 2030년 대비 태세 목적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지속적인 방위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대응력을 갖춘 EU 역내 방위시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방산물자의 EU 역내 이전 절차의 간소화와 안보 및 방위 조달의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전자의 경우 기존 방산물자의 역내 이전을 위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 2009/43/EC에 대한 개정을 통해 사전 승인의 무 면제를 확대하고 일반 이전 라이선스(GTLs: General Transfer Licences) 제도를 확장하여 방위산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방산물자의 역내 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회원국이 부여하거나 발행하는 일반, 포괄적 또는 개별 이전 라이선스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은 회원국에 대한 사전 승인의무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사례는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이행을 위한 이전, 구조화된 국경 간 산업 파트너십(structured cross-border industrial partnerships)의 틀 내에서의 이전, 위기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전, EU 조치에 따른 군사 및 방위

36) European Council(2025. 12. 8.),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Council gives final approval"(검색일: 2025. 12. 10.).

37) European Commission(2025d),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s 2009/43/EC and 2009/81/EC,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intra-EU transfers of defence-related products and the simplification of security and defence procurement," COM(2025) 823 final.

지원과 관련된 이전이 그것이다.³⁸⁾

한편 EU 역내 방산물자의 이전이 회원국 간 복잡하고 상이한 규제조건으로 인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일반 이전 허가(GTLs)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미 인증된 유럽 방위 사업체로의 이전에 더해 인증된 주체에 의한 이전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이전 및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입증했으므로, 간소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다. 또한 유럽방위기금 등 EU 방위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GTL 의무화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EU 방위산업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이전에 대해 일반 이전 라이선스를 발행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는 모든 국방 관련 제품과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이전을 포괄해야 하며, 회원국은 이 라이선스를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생산,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단계 포함)에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침 5조 (2)항에서 나열된 것 외의 다른 일반 이전 라이선스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³⁹⁾ 이러한 GTLs은 EU 방위산업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이전, 그룹 간 이전, 또는 위기 시 긴급 이전 등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회원국은 공급자들이 일반 또는 개별 이전 라이선스를 사용하거나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행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8) 기존 면제 사유인 정부 기관 또는 군대, EU-NATO-IAEA 등의 공급, 회원국 간 협력 무기 프로그램 등은 계속해서 유지됨.

39) Article 5조 (2)는 회원국의 다음의 네 가지 경우 일반 이전 허가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a) the recipient is part of the armed forces of a Member State or a contracting authority in the field of defence, purchasing for the exclusive use by the armed forces of a Member State.

(b) the recipient is an undertaking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c) the transfer is made for the purposes of demonstration, evaluation or exhibition.

(d) the transfer is made for the purposes of maintenance and repair, if the recipient is the originating supplier of the defence-related products.

European Union(2009), "Directive 2009/43/EC simplifying terms and conditions of transfers of defence-related products within the Community."

이러한 조건은 이전 및 수출 통제 분야의 의무 이행 능력과 관련 없는 기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었다.

한편 안보 및 방위 조달 간소화 관련해서 개정안은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회원국들이 방위조달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 금액 한도 상향 및 행정부담 완화다. 지참 2009/81/EC의 계약 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자원을 가장 중요한 계약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조달 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행정부담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에 공사 계약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한도가 44만 3,000유로에서 90만 유로로, 물품계약에 대한 한도는 553만 8,000유로에서 700만 유로로 상향된다. 또한 보고의무 축소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방위 조달 관련 통계보고 의무가 감소된다. 둘째, 조달 절차의 확대 및 혁신 지원이다. 회원국들이 조달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절차들이 도입된다.

- [공개 절차(Open Procedure) 도입] 방위조달은 여전히 회원국별로 분절화되어 있으며, 이런 분절화는 비용 인플레이션, 상호운용성 부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방위 수요를 통합하고 회원국의 경쟁 입찰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구매력 향상을 도모한다.
- [혁신 파트너십 도입] 혁신 파트너십은 기존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달 조치다. 협력 단계는 연구 및 혁신 프로세스의 단계를 따르며, 조달 기관은 각 단계 후 파트너십을 종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조건이 최초 입찰에 명시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 [경쟁적 병행 R&D 결과에 대한 간소화된 조달 절차] 경쟁적 병행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직접 조달을 위한 간

소화된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절차를 사용하려면, 병행 R&D 계약이 사전에 공고가 있는 협상 절차, 제한 절차 또는 공개 절차를 통해 수주되어야 하며, 조달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해당 R&D 계약 가치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와 협력업체는 EU, EEA, EFTA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에 경영진 구조(executive management structure)를 두어야 하며, 이들이 제3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동 조달 및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신속한 재고 보충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3개 회원국이 수행하는 공동 조달에 대해 사전 공고 없는 협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례가 2031년 1월 1일까지 도입된다. 이는 동일한 방위 제품 또는 사소한 수정만 가해진 제품의 조달에 적용되며, 조달된 제품에 대한 공동 유지보수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특례의 수혜를 받는 계약자 또는 협력업체는 EU, EEA, EFTA, 우크라이나에 설립되고 경영진 구조를 두어야 한다. 또한 제3국에서 발생한 부품 비용은 최종 제품 예상 부품 비용의 3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R&D 단계가 완료된 후속 단계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된다. EU 예산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EU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EU 방위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는 R&D 프로젝트는 최소 2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R&D 후속 단계에 대해서도 조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 협약 및 계약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방위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프레임워크 협약의 최대 유효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회원국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품의 서비스 기간이나 공급자 변경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에 관해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의 판례를 성문화하고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제49조 (a)는 새로운 조달절차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마. 군 기동성(Military Mobility) 규정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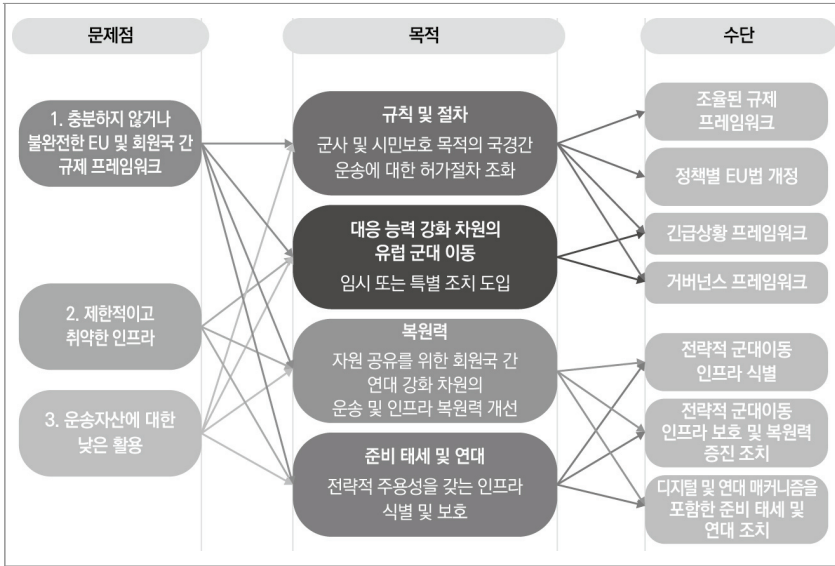
공동체 차원의 군대를 갖고 있지 않은 EU에서 회원국 군대가 군사적 목적으로 EU 역내 및 역외로 국경을 넘어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정 및 파편화된 절차와 명확한 조정 부재 등으로 인해 군 기동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국경 간 군대 이동 절차를 통일하고 유럽방위청(EDA)이 개발한 자발적 기술협정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기동성 규정을 제안했다.

동 규정의 4대 주요 목표는 국경 간 군 수송 간소화, 비상대응 강화, 인프라 대비태세 및 보호 개선, 연대 및 역량 공유 촉진이다. 국경 간 이동에 있어서 허가 관련 절차를 통일된 프레임워크에 구축하고 중단 없이 안전하게 군 수송을 보장하며 EU 외부 국경에서의 세관절차를 간소화한다. 비상대응 강화(EMERS: European Military Mobility Enhanced Response System)는 일시적·비상적·긴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군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조정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인프라 대비태세 및 보호 개선은 겸용 운송 인프라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겸용 인프라(SDI)를 모든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⁴¹⁾ 마지막으로 Solidarity Pool을 통해 운송 및 물류의 연대 및 역량 공유를 촉진하고, 군 수송을 위한 기존 운송 역량의 가시성을 제고한다.

40) European Commission(2025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to facilitate the transport of military equipment, goods and personnel across the Union," COM(2025) 847 final.

41) 전략적 겸용 인프라(SDI: Strategic Dual-use Infrastructure)는 항만, 공항, 에너지 및 통신 시설을 포함하며, 군사 이동성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임.

그림 2-7. 2025 군 기동성 패키지: 문제점, 목표 및 조치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5f),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Military Mobility"; SWD(2025) 847 final, p. 49.

1. EU 방산시장

가. EU 방산시장 평가⁴²⁾

EU 집행위원회가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발표한 배경에는 유럽 방산시장의 분절화가 크게 작용했다. 주로 대형 계약업체, 중간 규모 기업, 광범위한 주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EU 방위기술 산업시장은 2022년 기준 약 700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EU 회원국 중 방위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EU 역내 방산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비유럽 기업들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EU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19개 인⁴³⁾ 반면, 미국에는 48개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의 즉각적인 가용성이 EU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는데, EU의 방산기업들은 수년간 산업 위축과 투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지적했던 시장의 분절화로 인해 방산기업들은 지속적인 방산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⁴⁴⁾ 2022년 유럽방위청(EDA) 조정 연례 방위 검토

42) Clapp, Höflmay, and Vambrie(2025), "Building a common market for European defence."

43) Airbus, BAE Systems, Thales Group, Leonardo S.p.A, Rheinmetall AG, Saab AB, Rolls-Royce plc, MBDA, Dassault Aviation, Naval Group, KNDS, Safran, Fincantieri, Babcock International, Hensoldt AG, Diehl Defence, Kongsberg Gruppen ASA, Navantia, ThyssenKrupp Marine Systemes.

44) European Parliament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유럽 방산시장의 분절화와 투자 부족, 공급망 취약성의 문제점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CARD)에 따르면, 회원국의 방위 프로그램 중 18%만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협력도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회원국 간 협력은 자국의 계획에 부합하거나 국내 방위산업에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협력적 투자의 부족은 회원국의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유럽의회 보고서는 협력 제고를 통해 최소 180억 유로에서 최대 570억 유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⁴⁵⁾ 이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의 공동 조달 추진은 비용 효율 제고가 주목적이라고 평가된다.

EU 집행위원회의 무기 공동 조달의 적용대상인 SAFE 2개 범주에 해당되는 무기를 비롯해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MALE UAVs), 전술 탄도미사일, 장거리 포병로켓과 같은 특정 방위 제품에서 EU의 경쟁력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기 대규모 화력 부족, 전략적 지휘 체계의 구조적 약세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의 R&D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EU 역내 방산시장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에 대해 높은 의존을 선호하는 회원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유럽 방위를 선호하는 회원국 간 상이한 전략적 입장 때문이다. 이런 상이한 입장은 EU 회원국들이 다수 참여하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범유럽적 산업 논리가 아닌 각국의 국익이 우선시되고 있다.

더불어 EU 통합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위산업에서의 서로 다른 규제와 인증 체계가 EU 방산시장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각자의 조달체제에 따라 공공 조달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범유럽 조달시장이 아닌 국가 방위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장벽이 국가별로 존재하는 27개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다. 그러나 EU 기능조약 346조에 따라 EU 회원국들

45) Centrone and Fernandes(2024), "Improving the Quality of European Defence Spending: Cost of non-Europe report."

은 무기 공동 조달에 있어서 EU 규칙 적용의 예외로 회원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도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⁴⁶⁾

이러한 EU 역내 방산시장의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과 EU 기관들은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방계획이나 조달 조성 노력에 실패하고 있다. 앞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EU 차원에서 방위역량 및 방위산업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EU 차원의 방위 정책은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EU 차원의 방위 부문에 대한 예산이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EU로서는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다.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에 발표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자금조달 계획도 결국 공동체 예산은 1,500억 유로에 불과하고 회원국의 재정에 6,500억 유로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내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최대한 방위 부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예산지출 증액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6) TFEU. Article. 346.

1. The provisions of the Treaties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the following rules:
 - (a) no Member States shall be obliged to suppl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the essential interests of its security;
 - (b) any Member States may take such measures as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essential interests of its security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production of or trade in arms, munitions and war material: such measures shall not adversely affect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internal market regarding products which are not intended for specifically military purposes.
2. The Council may, acting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make changes to the list, which it drew up on 15 April 1958, of the produc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b) a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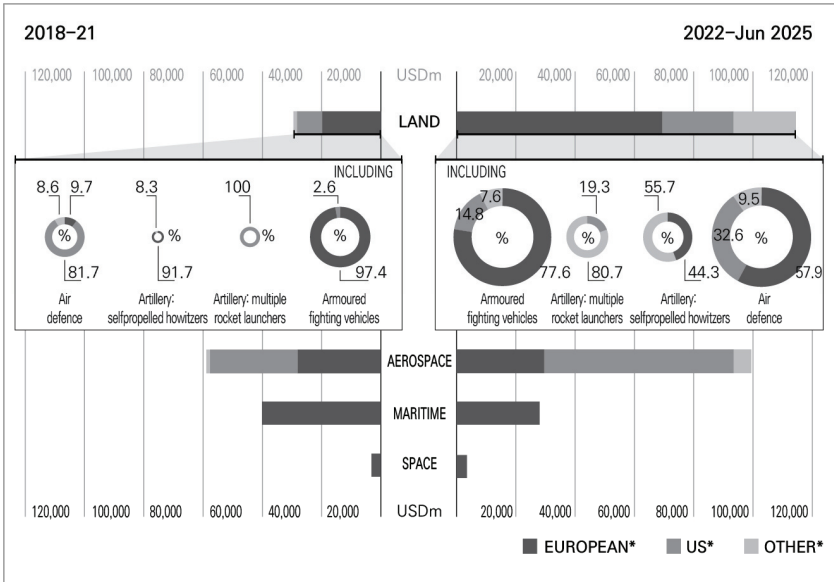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조율되고 효과적인 공동 방위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국경 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승인했다.⁴⁷⁾ 공동 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EDIRPA)에 따라 시행되는 5개 프로젝트에 각각 6천만 유로, 총 3억 유로의 자금이 지원된다. 5개 프로젝트는 세 개 분야(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획득, 현대식 장갑차 획득, 탄약 획득)에서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조달] 프로젝트 MISTRAL과 JAMIE는 공동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됨. MISTRAL은 9개 회원국(프랑스,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스페인, 헝가리,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이 참여하는데 단거리 방공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JAMIE는 6개 회원국(독일,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이 참여하며, IRIS-T SLM 방공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대식 장갑차 조달] 프로젝트 공동장갑차시스템(CAVS)은 4개 회원국(핀란드,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이 참여함.
- [탄약 조달] 프로젝트 포병탄약공동조달(CPoA) 155mm와 고폭탄(HE) 155mm가 있음. CPoA 155mm는 6개 회원국(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이 참여하며, HE 155mm는 4개 회원국(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47) European Commission(2024. 11. 14.), "EU boosts defence readiness with first ever financial support for common defence procurement"(검색일: 2025. 8. 15.).

그림 3-1. EU의 군사 장비별 수입 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비중(%))



자료: Hackett and Schreer eds.(2025), "Progress and Shortfalls in Europe's Defence: An Assessment," p. 59.

나. EU 방산 분야 주요 수출입

2020~24년 기간 중 전 세계 주요 무기의 국제 거래는 2015~19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미국은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프랑스(9.6%), 러시아(7.8%)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72%이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무기수출 비중은 73%로 2015~19년 비중(6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2020~24년 기간 무기 수출은 2015~19년 대비 2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107개국에 주요 무기를 공급했다. 주요 수출 지역으로는 2020~0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수출에서 유럽이 가장 큰 비중을 차

48) 글로벌 무기 수출입 관련 내용은 George *et al.*(2025),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4"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함.

지했는데 2020~24년 유럽의 비중은 35%로 2015~19년 기간 13%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수출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는데, 미국의 대유럽 수출 중 우크라이나의 비중은 26%를 기록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수출은 같은 기간 11% 증가하면서 러시아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2020~24년 기간 프랑스는 65개국에 주요 무기를 수출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동(28%), 유럽(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수출이 187% 증가했는데, 이는 그리스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전투기, 인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함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공급에 따른 것이다. 개별 국으로는 인도(28%)가 프랑스 무기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카타르(9.7%)와 그리스(8.3%)가 뒤를 이었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전 세계 5위 무기 수출을 기록했지만, 수출은 같은 기간 2.6% 감소했다. 독일의 무기 수출의 절반이 우크라이나(19%), 이집트(19%), 이스라엘(11%)에 집중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 6위 무기 수출국으로 수출이 138% 급증했는데, 이탈리아 무기 수출의 대부분은 중동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EU의 주요 군사 장비 및 기술은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⁴⁹⁾ 군용 항공 장비(전투기, 수송 및 임무용 항공기, 헬리콥터, 엔진), 지상 무기(중전차, 중·경장갑차, 군수 차량 및 전술 트럭, 포병 시스템, 모든 구경의 탄약 및 전투 장비), 해군 방위(잠수함 및 수상함), 방위 우주, 미사일 시스템(전술 및 전략), 방위 전자 장비, 정보통신기술(ICT), 사이버 및 자율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회원국별 무기 수출계약을 분석해 보면 프랑스가 항공기와 군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계약을 체결한 반면, 독일은 탱크 및 화력지원 차량과 같은 지상전 위주의 무기체계 계약이 높게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기타 장갑차 분야의 수출계약이 많았다.

49) Polytechnique Insights(2025. 4. 29.), "Defence industry: how Europe is boosting production" (검색일: 2025. 10. 20.).

표 3-1. 전 세계 무기 수출

(단위: %)

수출국		글로벌 무기 수출 비중		상위 3개 수입국
		2020~24년	2015~19년	
1	미국	43.0	35.0	1. 사우디아라비아, 2. 우크라이나, 3. 일본
2	프랑스	9.6	8.6	1. 인도, 2. 카타르, 3. 그리스
3	러시아	7.8	21.0	1. 인도, 2. 중국, 3. 카자흐스탄
4	중국	5.9	6.2	1. 파키스탄, 2. 세르비아, 3. 태국
5	독일	5.6	5.7	1. 우크라이나, 2. 이집트, 3. 이스라엘
6	이탈리아	4.8	2.0	1. 카타르, 2. 이집트, 3. 쿠웨이트
7	영국	3.6	3.6	1. 카타르, 2. 미국, 3. 우크라이나
8	이스라엘	3.1	3.2	1. 인도, 2. 미국, 3. 필리핀
9	스페인	3.0	2.3	1. 사우디아라비아, 2. 호주, 3. 튀르키예
10	한국	2.2	2.1	1. 폴란드, 2. 필리핀, 3. 인도

자료: George *et al.*(2025),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4," p. 2.

한편 유럽의 무기 수입은 2015~19년 대비 2020~24년 155% 급증하며, 전 세계 무기 수입의 28%를 차지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입은 105%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유럽의 높은 무기 의존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유럽 NATO 회원국들의 미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는 2015~19년 기간 52%에서 2020~24년 기간 64%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대 EU의 미국에 대한 무기 수입 의존도 감소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

표 3-2. 글로벌 10대 방산 수출국의 주요 수출계약 건수(2024년 이후)

구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Combat Aircraft	996	214	71	57		50	14			140
Combat Helicopters	342	3	13			26				

표 3-2. 계속

구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Major Warships	7	22	4	10	26	8	29		3	4
SAM	41		55+		33+		2	31+		26
탱크 및 화력지원 차량	403		454	500	416	96		19		916
기타 무장 차량	1,706+	537		2+	1,404+	1,865		124+	517	626+
포	678+	251		128+	72+			51+		1.203+

주: Combat aircraft - 전투 및 훈련기 및 대잠항공기 포함.

Major warships - 항공모함, 잠수함 등.

SAM(Surface-to-air missile, 지대공 미사일) - 자상기반 시스템만 포함.

자료: George *et al.*(2025),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4," p. 4.

좀 더 구체적으로 2017~21년 사이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를 통한 통보 기준으로 유럽 동맹국의 무기 수입은 평균 110억 달러였으나, 2024년에는 7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⁵⁰⁾ 이는 2009년 이후 유럽 평균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무기 의존은 특히 첨단기술 장비에서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방공 시스템, 미사일, 전투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주요 구매에는 첨단 소프트웨어, 향후 유지보수 및 현대화 같은 추가 장비 및 서비스도 포함된다.

국가별로도 그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24년 기간 중 FMS를 통한 통보의 약 30%는 폴란드가 차지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550억 달러 이상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2022~24년까지 FMS 통보가 전체 국방 조달의 19.63%에 불과했다. 품목별로 2020년 이후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FMS 통보는 주로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 및 미사일과 관련이 있다. 폴란드는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IAMD)와 통합 전투 지휘 시스템(IBCS)에 150억 달러,

50) 통보는 즉각적인 판매나 인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자금 지출 및 인도에 수년이 소요될 수 있음. Mejjion-Lopez and Wolff(2025).

AH-64E 아파치 헬리콥터에 120억 달러를, 핀란드는 F/A-18E/F 슈퍼 호넷 및 EA-18G 그라울러 전투에 150억 달러, F-35 전투기에 130억 달러에 이른다.

표 3-3. 2020년 이후 FMS를 통한 50억 달러 이상 무기 구매

(단위: 십억 달러)

국가	무기	금액
튀르키예	F-16 전투기	23
폴란드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및 통합 전투 지휘체계(IAMD, IBCS)	15
핀란드	F/A-18E/F 슈퍼 호넷 및 EA-18G Growler 전투기	15
핀란드	F-35 합동타격전투기	13
폴란드	AH-64E 아파치 헬리콥터	12
그리스	CH-47F 차누크 헬리콥터	9
독일	F-35 전투기	9
스위스	F/A-18E/F 슈퍼 호넷	8
폴란드	F-16 중도 개량 업그레이드(MLU)	7
루마니아	F-35 라이트닝 II 합동타격전투기	7
그리스	다목적수상전투함(MMSC: Multi-mission Surface Combatant)	7
스위스	F-35 합동타격전투기	7
폴란드	M1A2 SEPv3 주력전차	6
체코	F-35 전투기	6
독일	PAC-3 MSE 미사일	5

자료: Mejino-Lopez and Wolff(2025), "Europe's dependence on US foreign military sales and what to do about it," p. 10.

EU 회원국 중 무기 수입이 많은 국가는 2020~24년 기준으로 폴란드,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는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무기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든 자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폴란드는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급증하는데, 2022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1억 6,800만 TIVs와 1억 5,600만 TIVs를 수입으로 전체 수입, 2023년에는 6억 900만 TIVs와 5억 7,100만 TIVs, 그리

고 2024년에는 6억 4,400만 TIVs와 6억 8,100만 TIVs를 기록했다. 미국과 한국이 폴란드의 전체 무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45%와 44%로 절대적이다. 특히 폴란드의 무기는 미사일(25%), 장갑차(24%), 전투기(21%) 및 포(20%)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다른 EU 회원국들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이스라엘, 스웨덴 등의 국가도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표 3-4. EU 회원국별 무기 수입 규모(2020~24년)

(단위: 백만 TIVs, %)

수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2024	전체 비중
폴란드	153	68	409	1,334	1,448	3,412	17.54
네덜란드	575	512	733	372	360	2,552	13.12
그리스	92	231	441	404	623	1,791	9.21
이탈리아	201	211	237	485	432	1,567	8.06
덴마크	63	261	210	274	427	1,236	6.35
루마니아	168	143	186	344	278	1,118	5.75
독일	101	235	284	200	239	1,059	5.44
벨기에	90	255	170	12	515	1,042	5.36
헝가리	55	19	39	245	604	963	4.95
프랑스	225	105	133	120	188	770	3.96
스페인	70	134	198	178	148	727	3.74
스웨덴	3	122	318	98	66	606	3.12
리투아니아	119	109	75	111	51	465	2.39
슬로바키아	25	1	3	30	298	356	1.83
체코	8	32	69	148	50	306	1.57
핀란드	114	38	30	37	64	284	1.46
크로아티아			29	89	90	208	1.07
포르투갈	45	6		67	61	179	0.92
키프로스	30	11			115	156	0.80
에스토니아	25	20	18	25	63	150	0.77

표 3-4. 계속

(단위: 백만 TIVs, %)

수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2024	전체 비중
라트비아	10	15	34	42	10	111	0.57
룩셈부르크	88			1	3	92	0.47
오스트리아	14	34	5	17	13	84	0.43
아일랜드	9		1	63		73	0.38
슬로베니아		7		26	19	52	0.27
불가리아	44	1	3			48	0.25
몰타				45		45	0.23
EU	2,327	2,570	3,625	4,767	6,165	19,452	100.00

주: TIVs(Trend Indicator Values)는 SIPRI가 사용하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 거래 규모로 통상적인 절대 거래금액이 아니며, 국제이전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개념임. 즉 특정 국가로의 무기 흐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측정하기 위한 것임.

자료: SIPRI, "Arms Transfer Database"(검색일: 2025. 12. 2.).

2. 방위산업 생태계: 주요국의 방산 기업 및 클러스터

가. EU 개관

EU는 개별 회원국들과 함께 방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 달리 다층적(multilevel)이고 다핵적인(polynuclear)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런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EU의 방산시장이나 생태계는 비효율적이거나 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한편으로는 개별 회원국별 차별화되는 기술과 산업의 다양성 차원에서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평가다. 또한 EU는 전통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해 왔으며, NATO 및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중첩되면서 유럽의 방위산업 생태계는 복수의 주권이 중첩된 공간에서 작동한다.

EU 내에는 회원국 수만큼이나 다양한 군산복합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수평적 및 수직적 연결을 통해 다대다(many-to-many)의 유기적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철의 네트워크(iron Network)’라 명명되며, 그 중심부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주요 무기 설계, 생산 및 수출국들이다. 기타 중요한 산업 국가로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루마니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있는데, 이들은 특정 분야 또는 장비 및 하위 시스템 공급 분야에서 산업 및 기술 역량을 갖고 있다.⁵¹⁾

한편 EU의 방산 네트워크가 모든 수준에서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내 복잡한 관계 때문이다. 일단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EU와 NATO 관계를 들 수 있다. NATO는 회원국들의 조달 목록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EU는 자금 조달이나 산업 정책에서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조달 관련하여 NATO와 EU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4년 글로벌 매출 기준 100대 방산기업 중 EU 회원국의 상위 10대 기업에는 프랑스가 가장 많은 6대 기업이 있으며,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기업이 각각 1개씩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기업인 Thales는 159억 달러의 방위 부문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Thales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EU 기업 중 2위를 기록한 이탈리아의 Leonardo는 13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Thales와 마찬가지로 Leonardo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다. 100% 방산기업으로는 프랑스의 MBDA와 Naval Group, 네덜란드의 KNDS가 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상당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51) Marsh, Martins and Mawdsley(2025), “The European Iron Network: the remarking of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defence production following the Ukraine war,” pp. 1-21.

표 3-5. EU 상위 10대 방산기업 매출(2024년)

(단위: 십억 달러, %)

글로벌 순위	유럽 내 순위	기업명	국가	총방산 매출	전체 매출 대비 방산 비중
10	1	Thales	프랑스	15.9	72%
13	2	Leonardo	이탈리아	13.8	72%
14	3	Airbus	프랑스	12.7	17%
18	4	Rheinmetall AG	독일	8.2	78%
26	5	Saab AB	스웨덴	5.5	92%
27	6	MBDA	프랑스	5.3	100%
29	7	Safran	프랑스	5.2	18%
32	8	Naval Group	프랑스	4.8	100%
35	9	Dassault Aviation	프랑스	4.2	63%
37	10	KNDS	네덜란드	4.1	100%

자료: "2025 Top 100 Defence Companies"(검색일: 2025. 10. 30.).

나. 주요국 방위산업 기업 및 클러스터

1)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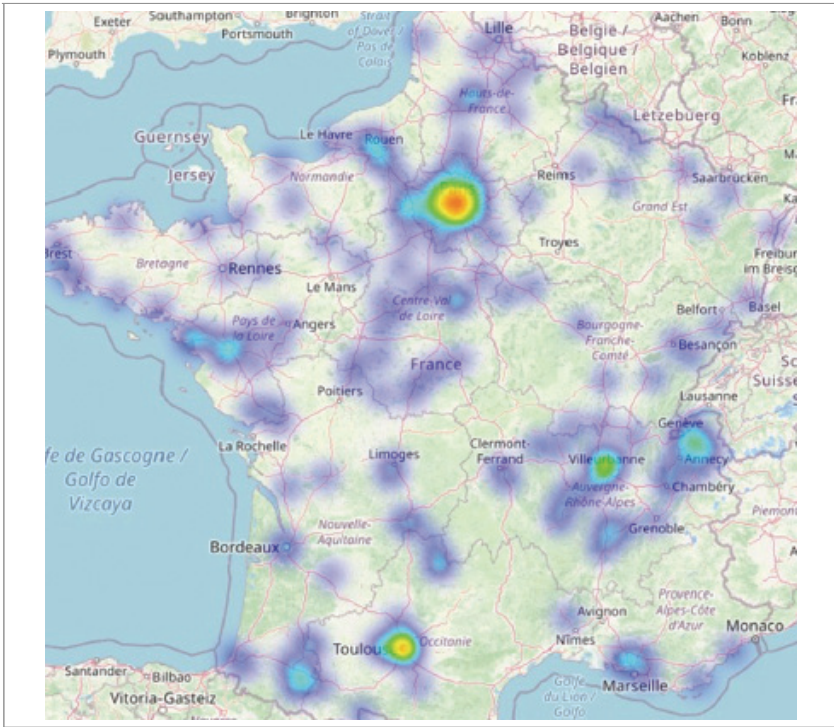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완결에 가까운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항공, 우주, 해군, 핵역지, 전자전, 미사일, 인공지능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프랑스의 주요 무기 수출은 전통적으로 복잡한 첨단 무기체계에 집중되어 왔는데, 전투기(Rafale), 핵공격 잠수함(Barracuda), 재래식 추진 잠수함(Scorpene), 그리고 최근 포병체계(Caesar self-propelled howitzers)와 미사일 체계(Mistral, Aster)의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방산기업은 Thales, Safran, Dassault, Naval Group, Airbus Defence and Space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과 직간접적인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공급업체만 약 2만 6,000개에 이른다.

지역적으로는 크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나뉜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파리의 일-드-프랑스(Ile-de-France)로, AI 및 R&D 중심지다. Thales, Safran, Dassault, MBDA 등의 주요 방산기업의 본사 및 연구개발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방산기업뿐만 아니라 폴리테크니크, ISAE-SUPAERO(고등항공우주연구소) 등 공학 및 방위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과 국방연구소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경쟁력의 핵심은 인력과 연구 역량, 정책결정의 집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브르타뉴, 대서양 연안의 해군 및 해양 클러스터다. 브레스트를 중심으로 한 동 지역에는 Naval Group 조선소, 해양 시험장, 해군기지, 해양 관련 대학 및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잠수함, 프리깃, 해양 시스템 생산과 관련된 부품 및 서비스 공급망이 형성돼 있다.⁵²⁾ 또한 이 클러스터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해군 클러스터와 더불어 유럽 해군전력의 노드로서, 유럽 내 수주뿐 아니라 호주, 인도, 중동 등 제3국 수출의 생산기지다. 세 번째로 틀루즈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우주클러스터다.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클러스터로서 전통적으로 민간항공 중심이었으나, 2025년 이후 방산클러스터로 전환되고 있다. Airbus, Thales, Safran 등 항공우주 기업이 틀루즈, 보르도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Delair(드론), Forges de Tarbes(포탄) 등 중소 방산기업이 위치해 있고 베르주라크(Bergerac)의 Eurencos 화학 공장 증설 등 탄약 및 폭약 생산이 늘고 있다.⁵³⁾

52) Schulze-Marmeling, Wilke, and Wulf(2022), "Defense Industry in Europe."

53) "Le Sud-Ouest de la France veut devenir un nouveau creuset des industries d'armement" (2025. 4. 25.)(검색일: 2025. 11. 11.).

그림 3-2. 프랑스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자료: Giacomello and Preka(2023), "Sources of strength: mapping the defence sector in Europe," p. 540.

2) 독일

독일 방위산업은 Rheinmetall, Krauss-Maffei Wegmann(KMW), Hensoldt, Diehl Defence, Airbus Defence and Space, MTU Aero Engines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⁵⁴⁾ Rheinmetall은 유럽 최대의 지상전 무기체계, 탄약 및 포병 시스템 공급자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수요에 힘입어 매출과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독일 방위산업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최근 EU의 재무장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54) Deutschland.de(2025. 7. 10.), "A strategic industry with a future"(검색일: 2025. 1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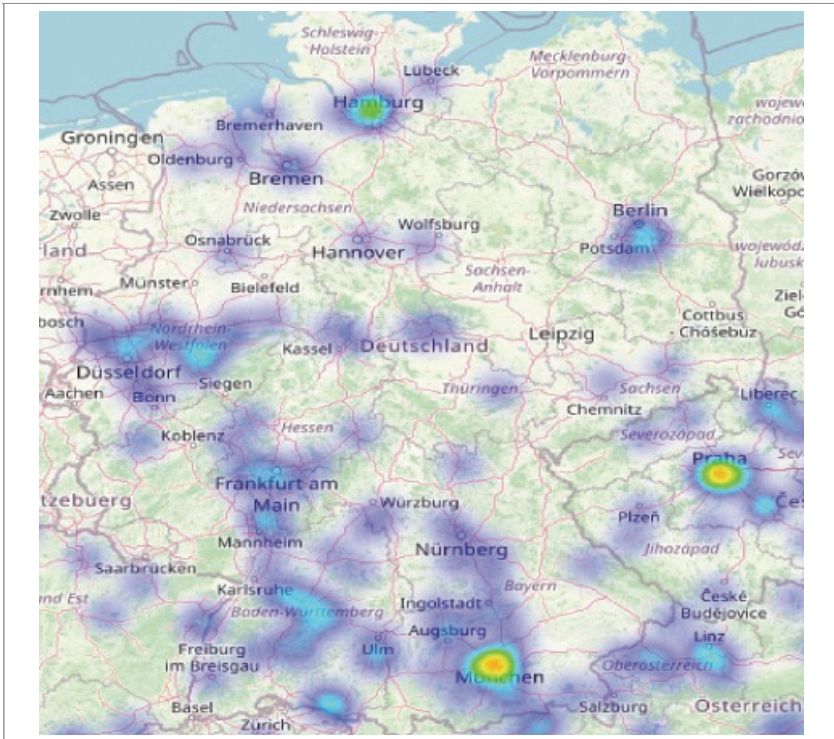
독일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⁵⁵⁾ 방위 클러스터는 크게 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이에른주, 헤센주,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및 니더작센이 그것이다. 뮌헨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에른주 클러스터는 항공 및 전자, 우주에 특화되어 있으며, 독일 방위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방산 기업의 본사·생산 공장·R&D 센터가 밀집해 있다. 뮌헨-아우크스부르크-잉골슈타트 축은 항공, 전자, 센서, 우주, 무인체계의 복합 클러스터로 유럽의 항공우주센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과 공과대학 및 연구소가 결합하면서 고도의 기술 집약형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헤센주는 프랑크푸르트-비스바덴-다름슈타트를 축으로 하는 사이버, 인공지능 및 체계 통합 중심의 클러스터다. 이 지역은 Hensoldt, Rheinmetall, KMW의 일부 시설과 함께 Fraunhofer SIT 등 사이버보안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융물류 허브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한 공급망 수출 인프라도 우수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및 니더작센주는 Rheinmetall의 주요 생산시설, 탄약 및 폭탄 공장, 기갑포병 플랫폼 조립라인 등이 위치하고 있다. 2025년 운터뤼스(Unterlüß)에 개장한 155mm 포탄 공장은 2027년부터 연간 35만 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 탄약생산 허브로 평가된다. 이 클러스터는 자동차 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여유 인력을 방산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산업동업 및 노동 전환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55) 베를린은 동부지역 유일의 방위 클러스터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그림 3-3. 독일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자료: Giacomello and Preka(2023), "Sources of strength: mapping the defence sector in Europe," p. 541.

3)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방산은 Leonardo를 중심으로 Fincantieri, MBDA Italia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중소 부품업체와 지역 클러스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Mediobanca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방산 및 보안 산업의 매출 구조에서 항공우주, 자동차가 총매출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이 23.3%를 차지한다.⁵⁶⁾ 이에 레오나르도와 핀칸티에리가 전체 방산 매출과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 헬기, 전자, 센서, 지상 체계를 포괄하고 있

56) decode39(2024. 11. 27.), "A snapshot of Italy's growing defence industry"(검색일: 2025. 11. 11.).

으며, 핀칸티에리는 해군, 상선을 모두 건조하는 유럽 최대 조선사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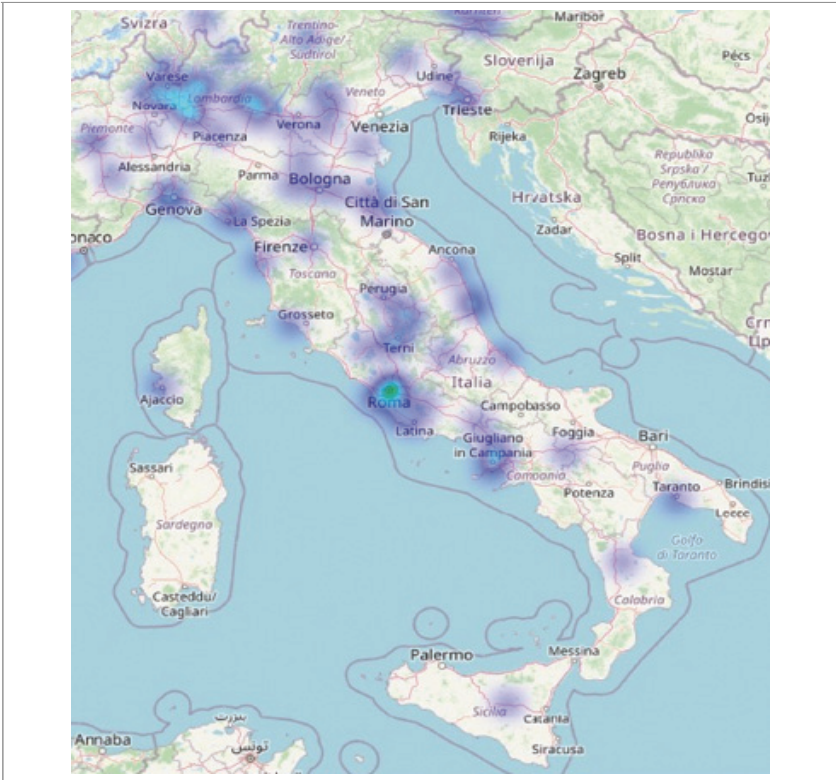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방위 클러스터는 북부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 리구리아주, 로마, 캄파니아 및 풀리아로 구분된다. 피에몬테의 토리노와 롬바르디아의 밀라노 지역은 레오나르도의 항공·전자 사업부, 다수의 항공·전자·센서 관련 중소기업, 폴리테크니코 디 토리노 및 밀라노 등 기술대학이 밀집해 있다. 유로파이터, C-27J 수송기, 헬기 플랫폼, 항공전자·레이더·전자전 시스템 개발의 중심이며, NATO·EU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유럽 항공전자 공급망의 핵심 노드 역할을 하고 있다.

리구리아 주 라 스페치아(La Spezia)는 MBDA Italia와 Fincantieri의 시설이 위치한 미사일 및 해군 클러스터다. MBDA에 따르면, 라 스페치아 공장은 미사일 시스템 개발·통합·실험, 공력·기계 설계를 담당하며, 다양한 유도무기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Fincantieri는 이 지역과 트리에스테, 몬팔코네 등에 조선소를 두고 프리깃, 코르벳, 순양함, 상륙함 등 다양한 군함을 건조한다. 미사일-해군-해양 시스템의 통합 클러스터로서 SAMP/T(지대공 미사일),⁵⁷⁾ Aster(수직 발사 지대공 미사일 제품군), Teseo(이탈리아 해군 전용 미사일) 등 미사일과 이들을 탑재하는 해군 플랫폼 간 연동을 시험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방위정책, 조달, 연구정책의 중심지로 레오나르도 본사, 방위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정책지휘 클러스터이다. 남부 캄파니아(나폴리)와 풀리아(타란토)에는 해군시지, 조선소, 부품업체 등이 위치하며, 지상·해군·항공 보급정비의 주요 거점이 된다.

57)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

그림 3-4. 이탈리아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자료: Giacomello and Preka(2023), "Sources of strength: mapping the defence sector in Europe," p. 544.

3. EU 방산시장의 변화: M&A와 혁신

가. EU 방위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M&A 확대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러시아로부터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방위 시장은 우주, 항공, 지상, 해군,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EU 방위 기업들의 기업 가

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중간값 기준으로 차기 12개월 EBITDA 대비 총기업가치가 약 7배에서 17배로 증가했다.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이 향후 몇 년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5년 5,00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8,000억 달러로 연평균 9%의 성장률(CAGR)이 예상된다. EU 회원국 중 주요 방위비 지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성장과 함께 M&A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동인을 지목할 수 있다. 첫째는 자본 가용성 증가다. 막대한 공적자금 및 민간 자본 투자가 방위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방위 기업들도 M&A를 통해 규모의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 환경을 활용하여 부채나 자기 자본 조달을 통해 M&A와 같은 비유기적 성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방 산업의 강력한 성장과 공적 자금 유입은 가치 창출 기회를 찾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탈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둘째는 비(非)방위(non-defence) 플레이어의 진입이다. 비방위 플레이어들이 소규모 방위 기업들을 인수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포착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유럽 엔진 및 대체 구동 장치 제조업체가 방위 드론 고성능 전기추진 시스템 전문 회사를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방위 분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지정학적 관심의 증대다. 첨단 방위 역량 구축과 핵심 기술 보호, 공급망 보안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EU는 전략적 파트너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와 부품 및 주요 원자재 공급체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달예산을 유럽산 우선 구매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M&A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방위 기업 육성, 공급망 탄력성 개선,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 효율성, 규모의 경제 달성 및 비용 절감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방위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방위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며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M&A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방위산업 기업보다 더 빠른 혁신 주기와 민첩성

을 보이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EU 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활발한 M&A 증가는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방위 독트린을 형성하고, 방위 생산 역량이 통합을 주도하고, 비방위 플레이어 위한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EU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⁵⁸⁾

EU는 방위역량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혁신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역지력을 구축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러-우 전쟁은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 우주 기반 시스템과 같은 파괴적 방위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전장 역학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국가 중심의 군용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스피노프(spun-off) 방식에서 반대로 민간기술을 방위기술로 이전하는 스피온(spun-on) 개발방식이 활발해지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EU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내에서만 230개 이상의 방위 기술 스타트업이 설립되었으며, 2024년에는 방위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뉴 디펜스(new defence) 주체의 등장으로 해석된다.⁵⁹⁾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무기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방위혁신 로드맵을 통해 방위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뉴 디펜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발표했다. 첫째,

58) European Commission(2025g), “EU Defence Industry Transformation Roadmap: Unleashing Disruptive Innovation for Defence Readiness,” COM(2025) 845 final.

59) 뉴 디펜스(New Defence)는 민간겸용 기술의 활용,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쟁, 민첩한 혁신 주기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추진되는 국방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함.

방위 및 딥테크 커뮤니티의 연결을 강화하여 파괴적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고 뉴 디펜스 주체의 출현을 촉진하며 기술 및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둘째, 첨단기술의 군사 역량 통합 가속화로 EU 회원국의 군사 역량에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통합하여 EU 전비태세와 효과적인 역지력을 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괴적 첨단 제조 솔루션을 통한 생산역량 강화로서, 속도, 규모 및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의 방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방위생산 역량을 재편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본질적으로 민군겸용(dual-use)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EU의 민간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는 것이 EU 방위 대비태세를 위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기술을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로서 앞서 언급된 인공지능(AI), 양자(Quantum), 우주(Space), 사이버(Cyber) 분야가 제안되었다. 첫째, 인공지능은 방위 혁신의 전략적 동인이다. 미래의 전장은 운동능력만큼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군사 전략을 재구성하고 의사 결정을 가속화하며, 드론 및 대드론 시스템, 방공, 정밀 타격, 지휘 통제, 물류 등 전반에 걸쳐 국방 우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군사방위 적용은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 내에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융합 및 분석을 통해 상황 인식을 개선하여 고위험 환경에 대한 인간의 노출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자 기술의 경우 국방 역량에 있어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기술이다. 이 중에서도 양자 센서는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이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비교할 수 없는 정밀도로 항법 및 표적 탐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 통신, 특히 양자 키 분배(quantum key distribution)는 초고도의 보안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우주 기반 기술(space-based technologies)은 의사 결정 우위와 작전 조정을 위한 데이터 백본을 제공하며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을 점점 더 뒷받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IRIS, 갈릴레오의 공공 규제 서비스(PRS: Public Regulated Service), 계획된 지구관측 정보 서비스는 우주 기반 솔루션의 방위 역량 통합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는 다섯 번째 전쟁 영역으로서 유럽 및 회원국의 방위 및 안보 측면에서 전략의 핵심요소이다.⁶⁰⁾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방위역량은 전장에서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신망, 에너지 기반 시설, 운송 및 금융 부문과 같은 중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파괴적 첨단기술의 방위 부문 적용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개의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①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② 방위 제품, 기술 및 시스템의 시장 출시기간 단축, ③ 새로운 방위역량 접근성 향상, ④ 방위 기술 인력 양성이 그것이다.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의 경우, 방산 기업이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성장에 필요한 자본이 EU 내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EU 자본시장의 구조적 단점과 방위 분야에서의 성장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EU는 2026년까지 5억 유로 이상을 EU 방산기업에 투자하는 방위자산펀드(DEF: Defence Equity Facility),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방위 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EU의 과학기술 R&D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을 통해 2026년부터 민군겸용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STEP Scale-up Scheme으로 핵심 방위기술 혁신을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것은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하여 2026년 1/4분기까지 사모 펀드의 지원을 받아 방위 관련 혁신적인 중소기업 및 스페일업에 성장자본을 제공하고 방위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한 최대 10억 유로 규모의 성장자본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방 제품, 기술 및 시스템의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려는 관련 계획은 아이디어에서 역량 확보까지의 방위 혁신 주기가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2030년까지 필요한 전비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는 평가에서 기인한다. 이에 다

60) 다섯 번째 전쟁영역이란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쟁을 의미함.

섯 개의 계획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첫째, 민첩한 신속 방위 혁신 파일럿 기구(AGILE) 제안, 속도, 대응성 및 고위 감수에 의해 추진되는 파일럿 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파일럿 기구는 6~12개월을 넘지 않는 결과 도출 기간으로 혁신 기업의 방위 분야 진출과 게임 체인징 솔루션의 배포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 AI 팩토리, 양자 시설 및 회원국 소유의 운영 시험 환경에 대한 뉴 디펜스 주체의 접근을 촉진하여, 방위 기술의 신속한 검증 및 개발을 원활하게 한다. 셋째, 제조-서비스형(manufacturing-as-a-service) 및 보안-서비스형(security-as-a-service) 지원 이니셔티브로, 2026년 2/4분기까지 제안하여, 중소 방산 기업이 기존 산업 및 보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초기 투자 필요성을 줄이고 생산 규모 확대를 가속화한다. 넷째, EU 전반의 방위 기술 인증 및 검증을 조정하기 위한 상호 인정제도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방위 데이터 공간(European Defence Data Space) 구축이다. 인공지능 모델, 디지털 트윈과 같은 게임 체인징 역량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방위역량 접근성 향상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신규 방위산업 진입자가 방위 계약에 접근하는데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 평시 설계되고 대형 시스템 통합자를 위해 만들어진 방위조달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종종 회원국별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달이 단순 구매가 아닌 산업 역량과 회복력 투자를 위한 전략적 행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U 방위산업전략 기술동맹(EUDIS Tech Alliance)'을 2025년 4/4분기 내 출범하기로 했다. 일단 우선순위 역량을 중심으로 방위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최종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EUDIS Tech Alliance를 통해 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EU 지원 방위 기술 및 제품 시장 조성으로, 2026년 4/4분기까지 유럽방위 기금 지원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의 신속한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2026년 4/4분기까지 우주 분야 기업에 초점을 맞춰 상업용 공급업체로부터 지리 공간 데이터와 같은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에 조달 예산 10% 할당을 권장하기로 했는데, 무기 조달 예산의 최소 10%를 신형 및 파괴적 기술에 책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위 및 민간 보안 조달 지침(Directive 2009/81/EC)을 개정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이고 신속한 조달 절차를 제안하고,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 및 제품 생산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율 시스템과 같은 파괴적 기술 개발에는 숙련된 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EU 내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보안허가 요구 사항(시민권 요구 등)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어렵게 한다. 또한 군대와 조달 기관 내부에서도 복잡하고 혁신적인 방위 시스템을 운영 및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술보증 파일럿 설정, 방위 산업 인재 플랫폼, 방위 산업 기술 아카데미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2025년 4/4분기부터 자동차 부문 근로자가 방위 부문과 같은 전략적 성장 부문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보증(Skills Guarantee) 파일럿을 구축한다. 그리고 2026년 4/4분기까지 점용 및 방위 중소기업의 인턴십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젊은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방위 중소기업의 인재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기존 EU 온라인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방위 관련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2028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EU 방위산업 기술 아카데미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 EU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 등 새로운 혁신 기술이 접목된 방위기술 개발이 방위 역량의 제고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EU의 신흥 방위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는 미국의 생태계보다 성숙도 측면에서 5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⁶¹⁾ 미국의 스타트업은 유럽보다 2~4배 더 많은 투자를 받으며 방위기술에서 월등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혁신본부(DIU: Defense Innovation Unit)는 대규모 계약체결에 성공하며 추가적인 투자와 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안두릴(Anduril)이나 팔란티어(Palantir)와 같은 미국 인공지능 회사들은 이미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을 계기로 EU의 방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투자 규모는 직전 3개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의 방위기술 스타트업은 각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를 단 하나의 대형 스타트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로부터 후기 단계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유럽 방위기술 스타트업 1위 기업의 펀딩 비중

	■ 나머지 스타트업	■ 1등 스타트업	전체 투자 중 1등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 %
Total		2,158	60
ISR 및 첨단 분석		1,341	62
무인 플랫폼	634		60
전자전 및 통신	68		61
장비 및 소재	60		20
지휘 및 통제(C2)	24		58
훈련 및 시뮬레이션	17		65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전	6		95
유인 플랫폼	4		72
지원 서비스	4		30

자료: McKinsey(2025), "European defence tech start-ups: In it fir the long run?" p. 5.

61) McKinsey(2025), "European defence tech start-ups: In it fir the long run?"

62) D3, Decisive Point, Tholus Capital과 같은 방위 전문 투자자, Lakestar와 같은 일반 투자자, 기업 VC 펀드, NATO 혁신기금이나 우크라이나의 Brave1과 같은 공공 펀드 등의 투자가 확인됨.

이에 대해 McKinsey(2025)는 유럽 방위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방위 관련 도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 전환 및 인재 유치,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조정, 더 넓은 공급 기반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에 접근하도록 조달 메커니즘 조정, 스타트업과 프라임 기업 간 협력 강화, 최종 사용자와의 반복적인 솔루션 개발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스타트업과 기존 국방업체 간 시너지 효과는 EU가 방위 혁신과 회복 탄력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한국의 방산수출 주요 정책

가. 방산수출 전략

2024년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첨단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2025년 123대 국정과제에서 방산 4대 강국 진입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⁶³⁾

한편 5개년 단위로 발표되는 방위사업청의 '2023~27년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첨단 무

63)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 113번 과제(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과제 목표] 방산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AI 등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 및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주요 과제]

- ① 방산수출] 방산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 실시.
- ②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 및 방산 소부장 전방위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글로벌 슈퍼' 양성.
- ③ 획득체계 혁신]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도입·R&D 체계 혁신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④ 첨단기술 산업기반 구축]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 전략분야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 빅테크 기업 육성.
- ⑤ 공급망 안정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검색일: 2025. 11. 20.).

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제품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전력 증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동 계획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및 4대 방산수출 국가를 방위산업발전 목표로 설정했다. 신속 전력화를 위한 방위산업 혁신과 더불어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도전적인 R&D 수행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한 목표다. 다른 목표는 4대 방산수출 국가로 방위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방산생태계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강화한다.

나. 국방기술기획서(2025~39년)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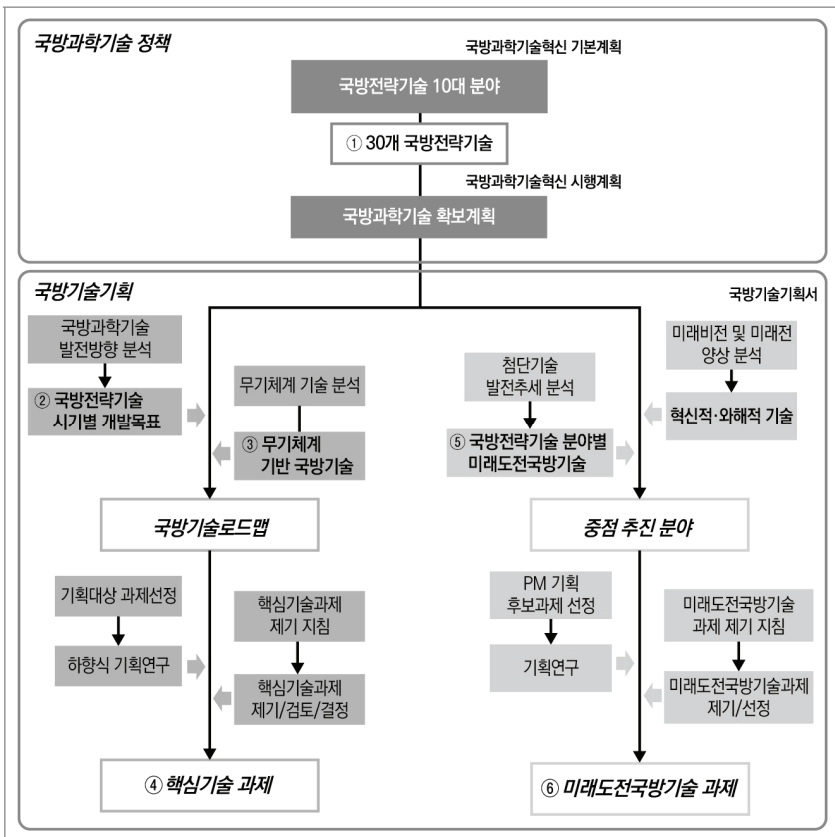
방위사업청은 2025~39년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10대 분야 30개 전략기술에 대한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방향과 기술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다.⁶⁵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4개의 중점 추진사항을 제안했다. 첫 번째 중점사항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전략적 기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전략기술별 도출된 시기별 예상 목표 성능과 이미 기획된 과제들 간의 기술 격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기술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두 번째 중점사항은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긴밀하게 연계된 핵심기술 기획이다.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나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에 수록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국내 기술 수준과 전력화 예상 시기를 고려하여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국방기술로드맵은 미래 첨단 무기체계가 목표한 시기에 차질 없이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사전에 성숙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중점사항은 소요창출형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기획이다. 이는 국방부의 미래 비전과 첨단 국방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아직 군의 수요가 결

64) 방위사업청(2025), 『25~39 국방기술기획서(일반본)』.

65) 국방기술기획서는 2023년에 마련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근거함.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방향 및 확보계획을 제시함. 위의 자료, p. 3.

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장의 개념을 혁신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 기획은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및 30개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0대 분야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센서·전자기전, 추진, WMD(대량살상무기)다. 정량적인 기술개발 목표 설정, 무기체계 작업 분할 구조 분석을 통해 주요 구성품 단위에서 필요한 기술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그림 4-1. 국방기술 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



자료: 방위사업청(2025), 『'25~'39 국방기술기획서』, p. 5.

10대 분야의 30개 전략기술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공지능: 지능형 전장 인식/판단, 지능형 통합 지휘결심, 스마트 전력지원, 국방 AI 플랫폼
- ② 유·무인 복합: 유·무인 협업(지상/해양/공중), 자율 임무수행(지상/해양/공중),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
- ③ 양자: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서
- ④ 우주: 우주기반 감시정찰, 초정밀 위성항법, 우주영역 인식, 우주비행체
- ⑤ 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차세대 동력원
- ⑥ 첨단소재: 고성능 반도체/전자소재, 극한환경 구조소재, 특수 기능소재
- ⑦ 사이버·네트워크: 초연결 네트워크, 사이버전 대응, 메타버스 훈련
- ⑧ 센서·전자기전: 차세대 센서, 센서 융합, 전자기전 대응
- ⑨ 추진: 첨단 엔진, 극초음속 추진, 수중 추진
- ⑩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미사일 방어, 고위력 정밀타격, 지능형 화생방 방어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전략기술을 포함해 세계 유수의 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동기술 개발은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닌 국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을 선점하는 경로로 활용된다.

다. 세계 및 자금지원

1) K-방산 수출펀드⁶⁶⁾

방위사업청은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600억 원 규모의

66) 방위사업청(2025. 12. 1.),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검색일: 2025. 12. 2.).

‘K-방산 수출펀드’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각각 8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펀드는 방산기업혁신펀드와 달리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여 마련한 방위 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시장 진출 잠재력을 갖춘 방산 관련 기업, 그리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2026년 상반기 1호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 집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10월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12월 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2)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⁶⁷⁾

2024년 2월 추진 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세 가지 방위 산업 기술이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되어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방산 수출에 필요한 투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방산수출 투자에도 세제 지원이 가능해졌다. 방산 업체와 협력업체가 위의 기술과 관련하여 R&D 및 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비는 20~30%, 시설 투자액은 3~12% 투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세제 지원을 받는 기술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나 그 구성품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조, 개발, 형상변경, 성능개량, 양산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제작, 조립, 인증, 시험평가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는 방산수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방산수출 지원의 경우 우리 군에 납품하던 무기체계를 방산수출 시 구매국 맞춤형으로 개조 및 개발하거나

67) 방위사업청(2025. 8. 1.), 「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검색일: 2025. 12. 2.).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R&D 기술을 포함한다. 공급망 안정화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 부품 및 구성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납기 지연이나 수출 통제로 인한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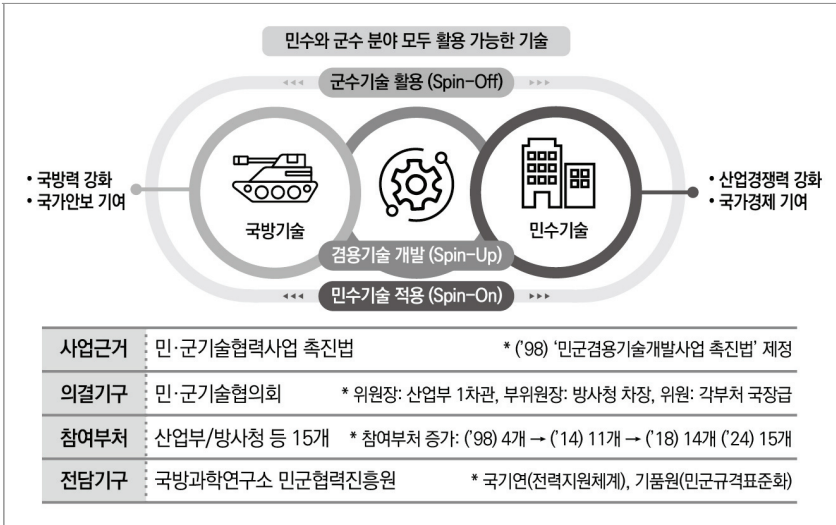
이 세제혜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방위사업청은 개편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 민군 방위기술협력 정책⁶⁸⁾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4월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민군기술협력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총 1,134억 원을 투자하여,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자립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I, 로봇, 드론 분야에 전체 투자 금액의 약 63%에 해당되는 72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이며,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연구개발 촉진, 규격 표준화, 상호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유형은 민군 공동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스피업(Spin-up, 겸용기술 개발),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스피온(Spin-on, 기술이전), 국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Spin-off와 함께 표준화 및 정보 교류 사업 등이 있다.

68)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2025. 4. 30.), 「AI반도체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박차 가한다」 (검색일: 2025. 8. 1.).

그림 4-2.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자료: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2025. 4. 30.), 「AI반도체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박차 가한다」(검색일: 2025. 8. 1.).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확대를 위해, 군이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군시범 운용이 확대된다. 또한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민군소통협력 플랫폼인 '첨단민군 협의체'가 가동된다. 2025년 주요 신규 과제로는 경호 특수차량용 방호소재 및 구조 경량화 기술개발, 소형 무인기용 전자식 연료 분사 방식 왕복 엔진 개발, 항공기 지상 점검용 복합장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민수용 특수차량이나 다목적 소형 드론뿐만 아니라 경량형 장갑차, 소형 정찰 드론, 전투기 및 훈련기 등 군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AI 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공지능 체계 신뢰성 시험 표준화 연구도 추진된다.

한편 국내 방산 기술 및 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IT, Fraunhofer 등 해외 연구기관에 설치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민군 겸용성이 높은 공동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국방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차세대

대 무기체계 부품개발 R&D도 추진된다. 또한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위산업청은 민군 기술의 상호발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마. 국방혁신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⁶⁹⁾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고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2~26년 기간 중 총 100개의 기업을 선정한다는 목표에 따라 매년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분야는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드론, 첨단소재 및 센서 분야 등이다.

2025년에는 21개 사가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및 종합 컨설팅과 같은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2025년에 선정된 21개 사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기술, 고정밀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군집 정보 수집을 이용한 사족보행 로봇 통솔 시스템 등 방위기술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69) 방위사업청 (2025. 12. 16.), 「멈추지 않는 국방 첨단산업 육성! 방산혁신기업 100 4기 21개사 선정」 (검색일: 2025. 12. 18.).

표 4-1. 국방혁신기업 선정

(단위: 개사)

구분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드론	첨단소재 및 센서 등	합계
1기('22. 12.)	3	3	2	1	5	4	18
2기('23. 8.)	2	3	2	3	5	2	17
3기('24. 9.)	4	5	3	2	6	7	27
4기('25. 12.)	4	6	2	3	5	1	21
합계	13	17	9	9	21	14	83

자료: 방위사업청(2025. 12. 16.), 「멈추지 않는 국방 첨단산업 육성! 방산혁신기업 100 4기 21개사 선정」(검색일: 2025. 12. 18.).

2.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 협력 가능성

가.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1) 전반적인 방위기술 경쟁력 평가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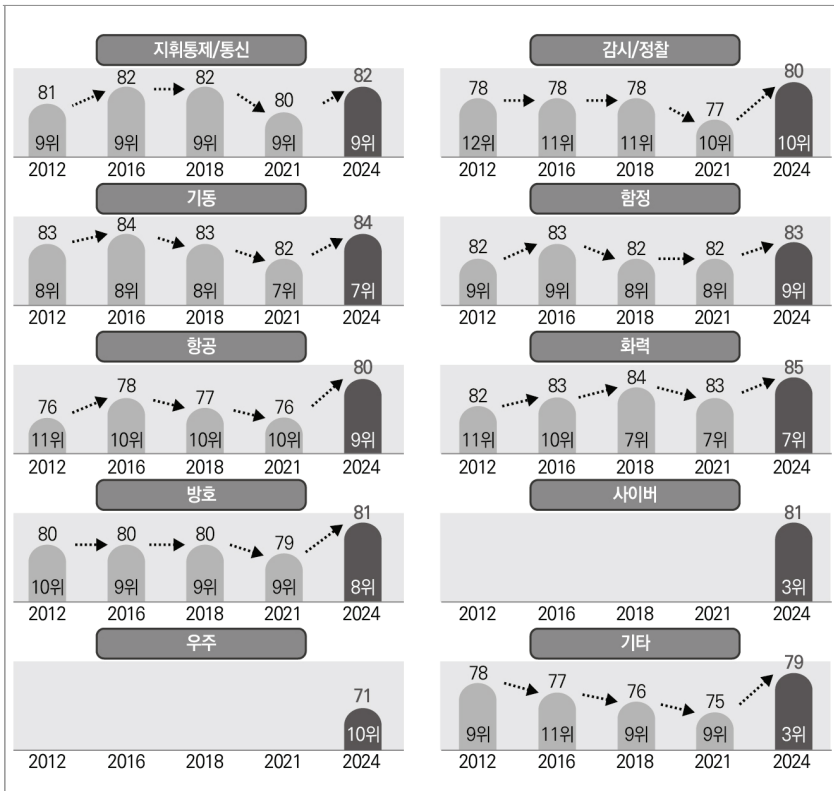
2024년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일본과 함께 8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직전 순위 9위에서 1단계 상승한 것이며, 최고 선진국 대비 82%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순위 상승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무기 체계 국내 개발과 국방 기술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가시적 성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대 분야 중 화력, 기동, 함정에서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기록했다. 화력 분야에서는 자주포의 성능 개량과 무인화 및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해 순위가 4위로 상승했다. 탄약의 경우 재래식 탄약의 자체 개발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거리 연장탄 개발 등을 통해

70)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4)는 3년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기동 분야에서는 K 전차의 성능 개량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 등 해외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다. 지상 무인 체계는 무인수색차량 개발 등 대형 무인지상차량(UGV)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순위가 2단계 상승했다. 함정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대부분 전함에 대한 설계 및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체계는 3,000톤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자체 건조 성공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로 기술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림 4-3. 한국의 10대 무기체계 유형별 기술수준 변화



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4),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p. 38.

반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게 조사된 분야는 우주 무기체계와 기타 분야다. 우주 무기체계는 2022년 누리호 발사 및 고체 추진 발사체를 통해 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핵심 구성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4년 신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 관련하여 한국은 공세적 사이버 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전장관리 체계 개발 등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전반적인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다.⁷¹⁾ 강점은 경쟁력 있는 기술, 대량 생산 능력, 빠른 납기 시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일관된 사후 관리, NATO 표준 시스템 적합성,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다. 특히 대량 생산 능력과 신속한 납기는 2020년대 초 글로벌 안보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기술 이전에 더 관대하고 구매자의 유지보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현지 생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약점으로는 기술 수준과 수출에 대한 외부 제약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첨단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핵심 수출 사업이 미국과 같은 원천 기술 보유국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핵심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전체 생산이 중단될 리스크가 있다.

2) 한국의 무기 수출

SIPRI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전 세계 무기 수출국가의 TIVs 기준 순위는 미국이 609억 4,900만 TIVs로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30억 9,700만 TIVs로 전 세계에서 2.2% 비중으로 1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기 수출에서 중동(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및 동남아(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주력 수출 대상국이 유럽, 특히

71) Paik(2024), "South Korea's Emergence as a Defense Industrial Powerhouse."

폴란드로 전환되었다. 폴란드는 20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무기 수출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수입 규모는 각각 5억 7,100만 TIVs와 6억 8,100만 TIVs를 기록하며 한국 무기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표 4-2.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2020~24년)

(단위: 백만 TIVs)

수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2024	전체 비중
폴란드	12	12	156	571	681	1,431	46.0%
필리핀	211	214	15			441	14.0%
인도	191	26				217	7.0%
UAE		9	9	9	189	216	7.0%
인도네시아	6	149	4			159	5.1%
태국	71				36	107	3.4%
뉴질랜드	96					96	3.1%
노르웨이	75	18				93	3.0%
콜롬비아	62					62	2.0%
페루		60				60	1.9%
핀란드	13	11	11	11	11	56	1.8%
에스토니아	11	11	11	11		43	1.4%
사우디아라비아			3	13	19	35	1.1%
우크라이나			11	11	11	32	1.0%
루마니아					13	13	0.4%
에콰도르	12					12	0.4%
세네갈	8					8	0.2%
이집트				5		5	0.2%
우루과이					5	5	0.2%
튀르키예	3					3	0.1%
칠레			1	1		3	0.1%
이라크	1					1	0.0%
나이지리아	1					1	0.0%
전체	772	510	220	631	964	3,097	

주: TIVs(Trend Indicator Values)는 SIPRI가 사용하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 거래 규모로 통상적인 절대 거래금액이 아니며, 국제이전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개념임. 즉 특정 국가로의 무기 흐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측정하기 위한 것임.

자료: SIPRI, "Arms Transfer Database"(검색일: 2025. 12. 2.).

무기 품목별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 방산수출의 중요 대상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2년에만 폴란드와 124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요국 맞춤형 무기 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능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다.⁷²⁾ 폴란드에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수출한 것은 EU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안보역량 외연 확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3년에도 2차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와 소형전술차량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5년에도 한국은 폴란드에 K-2 흑표 전차 180대, 총 6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2 흑표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늦게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폴란드형 K-2 전차 개발 및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한국은 폴란드 방산업체와 협력으로 현지에서 조립·생산될 예정이다. 한편 루마니아와도 2024년에 K-9 자주포를 포함한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표 4-3. 한국의 대EU 회원국 무기 수출: 품목별 수주물량(2020~24년)

(단위: 건수, 백만 TIVs)

주문 국가	품목	품목 설명	수주연도	수주물량	대당 TIVs
폴란드	FA-50	FGA 공격기	2022	12	16.45
	K-9 155mm	자주포	2022	308	4.34
	CTM-290 KTSSM	지대지 미사일	2022		1.4
	CGR-080 239mm	유도 미사일	2022	10,000	1.1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022	290	1.1
	K-9 155mm	자주포	2022	212	4.34
	FA-50 Block-20	FGA 공격기	2022	36	n.a
	K-2 흑표	전차	2022	180	4.75
	K-2 흑표	전차	2022	820	4.75

72) 방위사업청(2022. 11. 4.).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 170억 불 규모 달성」(검색일: 2025. 9. 30.).

표 4-3. 계속

(단위: 건수, 백만 TIVs)

주문 국가	품목	품목 설명	수주연도	수주물량	대당 TIVs
	KLTV	소형전술차량	2023	400	0.14
	K-9 155mm	자주포	2023	152	4.34
루마니아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	2023	250	0.1
	K-10	탄약운반장갑차	2024	36	0.39
	K-9 155mm	자주포	2024	54	4.34

주: TIVs(Trend Indicator Values)는 SIPRI가 사용하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 거래 규모로 통상적인 절대 거래금액이 아니며, 국제이전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개념임. 즉 특정 국가로의 무기 흐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측정하기 위한 것임.

자료: SIPRI, "Arms Transfer Database"(검색일: 2025. 12. 2.).

나. 협력 가능성 평가

냉전 종식 이후 EU의 군사안보는 미국 중심의 NATO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으며, 이로 인해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과 산업 기반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의 장기화 및 고강도 전쟁으로 인해 EU는 전력 현대화 및 방위생산 역량 개선이 중요한 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EU 방산협력은 EU에 새로운 전략적 의미를 제시한다.

첫째, 한-EU 방산협력은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EU 방산기업들은 기술력과 첨단 성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생산 능력 저하 및 역내 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EU는 러-우 전쟁 이후 급증한 무기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EU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통해 분절화된 EU 역내 시장의 통합과 방산기업의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전략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단기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과 합리적인 가격 대비 높은 성능,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양산-납품' 주기의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방산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한국과 EU 방산협력은 기술과 생산의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EU의 전략적 자율성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의 방산기업이 EU에 진출하여, 역내 방위생산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방산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AI)과 방위기술의 연계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경로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한국이나 EU 모두 방위역량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로 AI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AI의 방위 적용 기술개발에 대한 양국의 R&D 투자 수요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AI와 방위기술의 연계 속에서 한국과 EU가 새로운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를 발표하면서 AI 국방 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⁷³⁾ EU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방위기술에서의 파괴적 혁신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EU 모두 공동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한국의 AI-방산 기업과 EU 방산기업 간 공동 R&D 및 기술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한-EU 방산협력은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불균형적인 과도한 의존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역할이나 부담 공유를 통해 EU는 안보 방위 분야에서도 미국과 함께 글로벌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⁷⁴⁾ 이는 EU가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탄약생산지원법(ASAP), SAFE 등 적극적인 EU 차원의 방

73) 산업통상부(2025. 12. 3.), 「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I) 가속화’를 위한 동행」(검색일: 2025. 12. 20.).

74) Luiss 대학교의 방위산업 전문가는 방위역량 강화가 향후 미국이나 NATO와의 관계에서 협력 프레임워크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구매요청을 통해 EU 방산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임.

위산업 강화 정책을 통해 역내 생산 역량의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제3국과의 협력도 같이 고려하고 있으므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된다. EU는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인 SAFE에 제3국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다. EU는 안보방위파트너십(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s)을 체결한 국가와 SAFE 참여를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⁷⁵⁾ 그리고 2025년 12월 2일 캐나다는 처음으로 EU와 SAFE 협상을 통해 참여를 확정했다.⁷⁶⁾ 현재 한국과 튀르키예가 참여 신청을 한 가운데,⁷⁷⁾ 12월 13일 EU는 일본의 EU SAFE 참여 신청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⁷⁸⁾ 반면 영국은 EU와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적으로 참가국에 요구되는 참가비용으로 인해 참여를 포기했다.

물론 한-EU 방산협력에서의 위험 요인과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방산기업이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SAFE의 공동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AFE 참여를 위한 기여금이 요구되는데, 이는 협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EU가 한국에 어느 정도의 기여금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EU와 협상을 개시한 한국 정부가 재정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협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EU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 비중의 EU산 제품 사용 요구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리고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방산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한국에게는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EU 방위산업 공급망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첨단 방위기술 통제 및 현지 생산 공장 초기 투자에 따른 부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75) 2025년 6월 현재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체결 시점): 몰도바(2024. 5. 21.), 노르웨이(2024. 5. 28.), 한국(2024. 9. 4.), 일본(2024. 11. 1.), 북마케도니아(2024. 11. 19.), 알바니아(2024. 12. 19.), 영국(2025. 5. 19.), 캐나다(2025. 6. 23.).

76) "Canada to sign up to flagship EU defense credit fund"(2025. 12. 2.)(검색일: 2025. 12. 5.).

77) "Turkey and South Korea apply to join EU arms scheme"(2025. 9. 11.)(검색일: 2025. 11. 10.).

78) "EU confirms Japan's Bid to Join Security Action for Europe Defense Fund"(2025. 12. 13.)(검색일: 2025. 12. 14.).

그림 4-4. 한-EU 방산협력의 SWOT

<p>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 보완성 • 유사입장국 간 신뢰 	<p>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규범에 대한 영향력 미흡 • 기술 및 지적권 통제 가능 • 유럽투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공동체 자금 및 공동조달 •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방산 역량 육성 의지 • AI, 양자, 우주와 같은 첨단 방위기술에 대한 공통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FE 참여에 대한 재정 기여 • EU 역내 방산강국의 견제
<p>Opportunities</p>	<p>Threats</p>

자료: 저자 작성.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가. 연구 주요 내용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1952년 실험적으로 출범한 EU는 역내 단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통합에 적극 나섰다. 안보 및 방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TO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EU 회원국들도 방위산업과 그 역량 강화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했다. 이런 결과로 EU의 방위비 지출을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군사안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즉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통해 EU 및 회원국들의 논의와 대화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상설 구조화협력(PESCO),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유럽방위기금(EDF), 전략적 나침반과 같은 다양한 정책 및 투자기금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표 5-1. EU 방위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	목적	주요 행위자 및 승인	연도
역량개발메커니즘 (CDM)	EU 방위역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위 수요 및 역량 부족 식별	유럽대외관계청(EEAS) 내 EU 군사참모진	2003
역량개발계획 (CDP)	회원국 방위역량 평가 및 협력 기회 모색과 우선순위 정보 제공	유럽방위청(EDA), 회원국 정부, EU 군사참모진	2008
상설구조화협력 (PESCO)	EU 회원국 간 방위협력 심화를 위한 조약 기반 프레임워크	유럽대외관계청(EEAS), 유럽방위청(EDA) 및 PESCO	2017

표 5-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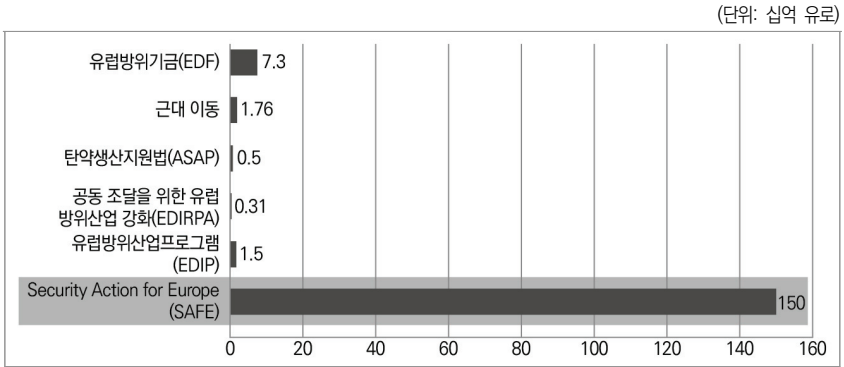
정책 및 프로그램	목적	주요 행위자 및 승인	연도
유럽방위기금 (EDF)	80억 유로 규모의 방위 연구, 혁신 및 역량 개발	EU 집행위원회, 유럽방위청(EDA) 유럽대외관계청(EEAS),	2017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EU 방위환경에 대한 개요 및 협력 기회 식별과 협력 촉진	유럽대외관계청(EEAS), 유럽방위청(EDA), EU 회원국	2017
공동 조달을 위한 유럽방위산업강화 (EDIRPA)	3억 유로 규모 단기 수단으로, 방위 장비 공동 조달	EU 집행위원회, 유럽방위청(EDA), 유럽대외관계청(EEAS)	2023
탄약생산지원법 (ASAP)	5억 유로 예산으로 탄약생산 확대	EU 집행위원회, 유럽방위청(EDA), 유럽대외관계청(EEAS)	2023
유럽방위산업전략 (EDIS)	EU 최초 방위산업전략으로 유럽 방위산업 기반(EDTIB) 강화	EU 집행위원회	2024
유럽방위산업백서 및 SAFE	방위산업 역량 강화 및 공동 조달(SAFE)	방위역량 우선 순위 분야 식별 및 1,500억 유로 규모 공동 조달	2025
방위혁신로드맵	방위 혁신기술개발 및 방위 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해결	EU 집행위원회	2025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방위 장비 공동 조달 장려	EU 집행위원회	2025 (합의)
역내 방산물자 이전 및 조달 지침 개정	EU 역내 방산물자의 이전에 대한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제 개선 및 방산물자 조달 간소화	EU 집행위원회	2025 (제안)
군 기동성 규정	군대의 EU 역내 이동에 대한 규제 간소화	EU 집행위원회	2025 (제안)

자료: Clapp(2025), "European capability development plannin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러다 2022년 러-우 전쟁을 계기로 EU의 방위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장기화되는 전쟁과 새로운 첨단기술이 접목된 전장의 변화와 함께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EU는 방위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EU 역내 방위시장은 분절화되어 있고,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무기를 조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비EU 국가에 대한 높은 무기 의존도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재무장 계획 및 공동 조달을 위한 SAFE 자금지원을 발표했

다. 특히 1,500억 유로 규모의 SAFE 자금은 2025~30년 기간 중에 운영되며, 이는 기존 EU 차원에서 집행되거나 운영되던 자금수단(유럽방위기금, 군사이동성, ASAP, EDIP 등)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규모다.⁷⁹⁾

그림 5-1. EU SAFE과 다른 방위 관련 자금 규모



자료: Sabatino and Lawrenson(2025), "The SAFE Regu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Non-EU Defence Suppliers," p. 8.

EU 회원국 중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을 확보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인데, 이 국가들은 대표적인 방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Airbus와 Thales, 독일의 Rheinmetall, 이탈리아의 Leonardo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에는 방위산업 분야별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들이 상호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EU 집행위원회는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EU 역내 방위 제품 이전 및 조달 관련 지침 개정안, 군 기동성 규정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EU 역내에서 방위 제품 및 군대의 이동에 대한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제를 조정하고 간소

79) 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는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과 결속기금(Cohesion Fund), STEP(유럽 플랫폼을 위한 전략 기술), Horizon Europe,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 등도 방위 부문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화시키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역지력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⁸⁰⁾ 결국 유럽은 분절화된 시장을 통합하고 EU 역내 중심의 방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실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전쟁 양상에 따라 파급적 혁신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편 EU 회원국의 무기 수입에서 미국은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 무기와 NATO에서의 상호운용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⁸¹⁾ 2020~24년 기간 회원국 중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는데, 러-우 전쟁으로 커진 안보위협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폴란드 무기 수출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특히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39 천무, K-2 전차 등 한국의 대표하는 무기가 주요 품목이 되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 정부는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0년 이후 한국의 방산수출 실적을 감안할 때 방산강국 진입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국 방산기업의 경쟁력은 화력, 기동, 함정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 정부와 방산기업이 경쟁력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폴란드와 필리핀, 인도, UAE 등 특정국에 편중된 방산 수출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80)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EU 입법 우선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유럽 방위 및 안보의 새로운 시대, 유럽의 지속가능한 번영·경쟁력·간소화 확보, 삶의 질 개선, 국경 관리 및 이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 보장, 민주주의 및 가치 수호, 글로벌 영향력과 파트너십 활용임. European Union(2025), "Joint Declaration on the EU legislative priorities for 2026," C/2025/6793.

81)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유럽의 방위산업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의 유럽 내 생산 확대가 요구됨. NATO Defence College 박사연구원 인터뷰 내용.

표 5-2. 연구 결과: 주요 핵심 주제 및 내용

	핵심 주제	주요 내용 및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	전략적 자율성 강화 및 재무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SAFE[무기 공동 조달, 유럽산 (EU, EEA/EFTA, 우크라이나) 비중 65%] • EDIP(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 역내 방위 제품 이전 및 조달 지침, 군 기동성 규정
EU 방위 산업 시장 구조와 생태계	시장 분절화 해소 및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방산물자의 높은 수입 의존도: 78% • EU 역내 주요 방위산업 생태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주요 방산기업: 프랑스(Thales Group, Airbus), 독일 (Rheinmetall), 이탈리아(Leonardo) ✓ 주요 방위 생태계: 프랑스(Île-de-France 지역의 AI 중심 및 R&D, 브르타뉴 대서양 지역의 해양/해군, 툴루즈 지역의 항공우주), 독일(다른 국가와 달리 수도 전국에 걸쳐 골고루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바, 바이에른주의 항공/우주, 헤센주의 인공지능 및 체계 통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및 니더작센주는 지상무기), 이탈리아(토리노와 밀라노 중심의 항공/센서, 리구리아주의 미사일/해군, 로마의 R&D 및 방산정책, 캄파니아와 풀리아의 해군) • EU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 AI, 양자, 사이버, 우주 중심 ✓ 뉴 디펜스 지원을 위해 방위 및 덤테크 커뮤니티 연결 강화, 첨단기술의 군사 역량 통합 가속화, 방위 생산역량 강화 ✓ 4개 행동계획: 방산 기업 투자, 시장 출시기간 단축, 새로운 방위역량 강화, 방위 기술인력 양성
한-EU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 한-EU 방산협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방산강국 목표: 2027년까지 세대 4위 진입 ✓ 한국 방산은 화력, 기동, 함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 확보 ✓ 한국 대세계 무기수출 대상국(2020~24년): 폴란드가 46.0%로 가장 높으며, EU 회원국 중에는 핀란드(1.8%), 에스토니아(1.4%), 루마니아(0.4%) 순임. ✓ 한국의 주요 무기수출 품목: 공격기, K-9 자주포, 미사일, K-2 흑표 전차, 다연장 로켓(천무) • 한국의 10대 전략기술(AI, 양자, 우주 등) 확보 추진 • 한국 방산의 경쟁력: 대량 생산 역량, 신속 납기, 가성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 한-EU 협력 가능성 검토: 상호 보완적 성격의 방위산업 역량 및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한국의 기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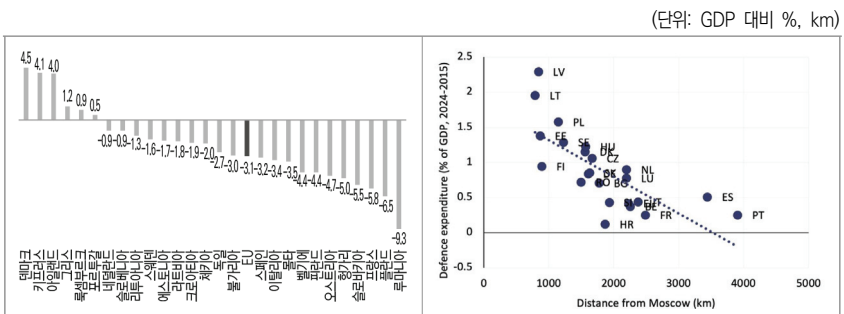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EU 방위산업 전략 및 정책 평가

1) EU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증액 예산 여력

EU 집행위원회가 EDP 적용 유예를 인정해줌으로써 재정적자가 GDP 대비 3%에 근접해 있는 회원국들도 방위산업에 대한 예산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있다.⁸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원회가 기대하는 만큼 방위산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를 기록하고 있는 EU 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2. 2024년 EU 및 회원국별 재정수지(좌)와 모스크바로부터의 거리(우)



자료: Eurostat DB, "Government deficit/surplus, debt and associated data"(검색일: 2025. 10. 13.); Croitorov, Felke, Krämer, and Lichetta(2025. 12. 22.), "Macroeconomic impacts of defence spending"(검색일: 2025. 12. 22.).

2024년 EU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1% 수준이나 회원국별 재정적자 수준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 키프로스, 아일랜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루마니아, 폴란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은 5%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그만큼 재정적

82)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에 나서는 가운데 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강조함. 정준오(2025), 「EU의 방위자강 모색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자도 높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런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인접해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방위비 지출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자 수준도 높다는 점이다. 향후 방위비 지출 증액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국가들은 자국 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직접적인 무기구매 지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경제성장, 공공서비스 및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재정여력이 높으면서 향후 방위비 지출 증액 의지를 갖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직접적인 무기구매는 물론 자국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방위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는 복합적이며 연구방법이나 접근 방식에 따라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⁸³⁾ 그러나 결국 국가는 안보와 전쟁 억지력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방위비 지출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연구에 따르면 효율적인 방위비 지출 차원에서 방위 R&D 지출은 민간 혁신을 자극하며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⁸⁴⁾

결과적으로 EU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증액은 각국이 처해있는 방위 상황 및 재정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력이 있거나 자국 내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을 보유한 국가는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방위 부문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여력이 제한적이거나 러시아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무기구매에 초점을 맞춘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EU 회원국 정부가 자국민들과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하는 선행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국민들

83) 브뤼셀 자유대학교 EU 방위 분야 교수 면담 및 Fiott(2025), Fiott은 방위비 증액보다 방위비의 효율적인 지출을 강조함.

84) ECB(2025), "Economic financial and monetary developments"(검색일: 2025. 12. 18.).

의 지지가 부재하다면 EU 집행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회원국의 방위 분야 6,500억 예산지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2) EU 역내 핵심원자재 배분을 둘러싼 경쟁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은 방위산업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광물은 방위 기술에 필수적이다. 「핵심원자재법」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34개 원자재 중 26개가 방위 장비에 사용된다.⁸⁵⁾ 일부 원자재는 방위 장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원자재는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NATO도 방위 기술 필수 원자재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원자재는 첨단 방위 시스템 및 장비 제조에 필수적이며, NATO 기술적 우위와 전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⁸⁶⁾ NATO의 원자재 중 베릴륨을 제외한 모든 원자재는 EU CRMA의 전략 원자재와 일치한다. 47개 EU 기반 프로젝트 중 45개와 13개 비EU 프로젝트 중 11개가 NATO가 방위 기술에 있어 필수로 분류하는 광물과 관련되어 있다.

EU의 입장에서는 기존 기후중립 기술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가 방위산업에서도 사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후중립 기술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결국 핵심원자재의 배분에 있어서 기후기술과 방위 모두에서 공급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EU 역내 기관 및 시민단체와 방산 기업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5) IPSI(2025. 7. 8.), "The EU Critical Raw Materials Act and the defence industry"(검색일: 2025. 11. 3.).

86) 2024년 11월에 발표된 NATO의 방위 분야 핵심 원자재는 총 12개이며, 이를 공급망 리스크 수준별로 Very High, High, Medium, Low의 4단계로 구분됨.

- Very High: Aluminium, Graphite.
- High: Beryllium, Cobalt, Germanium, Platinum, Titanium, Tungsten.
- Medium: Gallium, Lithium, Manganese, REEs.

NATO(2024. 12. 11.), "NATO releases list of 12 defence-critical raw materials"(검색일: 2025. 10. 20.).

표 5-3. 핵심원자재와 첨단 방위 시스템 및 장비 제조

EU 핵심원자재	NATO 방위-핵심원자재	방위 분야 사용처
Antimony		탄약, 군복, 전자장비
Bauxite/Almunia /Aluminium	O	항공기 기체, 탄약, 초계함, 포병, 잠수함. 미사일, 장갑차, 어뢰
Beryllium	O	미사일 유도 시스템, 탄약, 포병, 전투기, 주력 전차
Bismuth		탄약, 화학 자극제 성분
Boron		방호시스템, 장갑, 군용 장비의 구조적 구성 요소
Cobalt	O	제트 엔진, 미사일, 잠수함, 초계함
Copper		탄약, 포병, 초계함, 미사일, 주력 전차, 전투기
Gallium	O	반도체 장비, 레이더 시스템, 위성통신
Germanium	O	적외선 광학, 광섬유, 야간 투시 장비, 탄약, 포병
Hafnium		항공우주 기술의 초합금, 군사 통신, 산업 제어
Heavy REEs	O	미사일 유도 시스템, 레이저, 레이더 및 수중 음파 탐지기 변환기
Light REEs	O	레이저, 디스플레이, 고강도 재료
Magnesium		어뢰, 미사일, 전투기, 장갑차, 헬리콥터, 통신 장비, 레이더
Manganese	O	무장(주력 전차, MBT), 주요 수상 전투함, 배터리
Graphite	O	무장, 주요 수상 전투함(추진, 센서)
Nickel-battery grade		포병, 주력 전차(MBT), 주요 수상 전투함. 전투기
Niobium		미사일, 전투기, 핵 잠수함, 헬리콥터
Platinum group metals	O	전투기, 장갑차, 잠수함, 주력 전차(MBT)
Scandium		전투기
Silicon metal		주력 전차(MBT), 주요 수상 전투함, 전투기, 미사일
Tantalum		탄약, 포병, 주력 전차(MBT), 미사일, 전투기
Titanium metal	O	탄약, 전투기, 주력 전차(MBT), 주요 수상 전투함, 미사일, 돌격 소총
Tungsten	O	탄약, 주력 전차(MBT), 미사일, 해군 함정, 전투기
Vanadium		돌격 소총, 주력 전차(MBT), 전차 무장, 총 및 어뢰 발사관, 전투기

자료: IPIS(2025. 7. 8.), "The EU Critical Raw Materials Act and the defence industry"(검색일: 2025. 11. 3).

3) EU 군사안보에서의 회원국 협력 진전 여부

EU 통합의 역사에서 군사안보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졌는데, EU의 권한보다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인정되고, 회원국 간 공동방위나 유럽군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EU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TO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군사안보보다 경제와 산업에 재정지출을 집중해왔다. 또한 회원국 간 서로 상이한 위협 인식과 방위안보의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방위정책은 회원국 독자적으로 또는 일부 회원국이 소규모 연합으로 추진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회원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독자적인 방위정책 및 방위산업 지원정책을 선호했다.⁸⁷⁾ 프랑스는 높은 방위 R&D 투자, 복잡한 무기 체계 관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독일은 민간 분야 기술적 경쟁력이 방위 경쟁력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장기적 시장 통합이나 단기 공동 무기 개발 등에서 프랑스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독일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⁸⁸⁾ 또한 군사 및 무기의 EU 역내 이동 관련하여 EU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제와 조율의 부재라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회원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이해충돌은 EU 방위역량 강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⁸⁹⁾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서로 상이한 외부 위협인식도 EU가 러-우 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다. 회원국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방위 부문에서

87) Calcara and Simón(2025), "Face to face: France, Germany and the future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pp. 1389-1413.

88)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간 방위협력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량 제고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명확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 IAI 방위·안보·우주 분야 전문가 면담 내용.

89) Luiss 대학교 방위산업 분야 교수 면담 내용.

공동의 위협에 기반한 대응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러-우 전쟁으로 계기로 EU는 적극적으로 방위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회원국 간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EU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방위역량 구축은 과거처럼 다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⁹⁰⁾

실제로 EU 회원국 중에서는 유럽드론방어막(최근에는 ‘드론 방어 시스템’으로 명명) 방위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부 회원국이 드론 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 관할이 아니라 회원국과 NATO 동맹의 관할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⁹¹⁾ 즉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규모 방위산업체를 보유한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의 프로젝트보다 연합체를 구성해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2. 한-EU 방산협력 정책 제언

가.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

동유럽은 한국 방산의 EU 진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루마니아, 체코 등은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방산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격, 납기 경쟁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한국 방산기업에는 유리하다. 이 국가들은 서유럽과 달리 공급망 기반이 약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역량을 키우고자 하

90) EU의 방위산업 강화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 조달의 경우에도 회원국 간 상이한 무기수요로 인해 EU가 기대하는 방산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음. Bruegel 연구소의 방산전문가 면담 내용.

91) "European drone wall, other 'flagship' defence projects at risk in EU power struggle"(2025. 12. 16.)(검색일: 2025. 12. 20.).

는 수요 또한 높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 상대국이다. 방산수출을 넘어 유지보수·관리·운영(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을 통해 한국의 방산 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폴란드 및 루마니아와 함께 한국이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즉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동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EU와 NATO의 전력 현대화 흐름에 맞춰 전략적 가치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과 다자 방산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와 함께 한국이 3국 공동으로 다자 방산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 공유, 공동 조달, 공동 생산 기준을 마련하는 산업협력 틀을 구축한다. 또한 EU 프로그램(EDIRPA, EDIP)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EU와 협의하고, 동유럽에서 만들어진 한국 무기체계가 ‘Made in Europe’ 조건을 충족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 군 지휘부 및 정부와의 고위급 방산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여, 기업 간 협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전략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동유럽 각국의 산업 생태계와 기술 수준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가별로 조립 생산, MRO, 부품 제조, 업그레이드 등 역할을 차별화한 생산 배치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전차 및 자주포 조립 및 정비의 중심지, 루마니아는 포병 탄약 및 부품 생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배를 통해 동유럽 전체에 걸친 수평적 공급망 구조가 형성되며, 한국 기업은 EU 전역에서 지속적 주문과 유지보수 계약을 확보할 수 있다.⁹²⁾ 또한 기업은 현지 중소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92)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인 WB 그룹과 합자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현지생산을 통한 천무 3차 계약을 체결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에 5조 6천억 유로 미사일 ‘천무’ 공급계약」(2025. 12. 31.)(검색일: 2026. 1. 2.).

협력국이 원하는 산업역량 강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

물론 폴란드-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에는 정치적·제도적 제약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조사도 요구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 간 무기 수요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 내부의 숙련된 방산인력 부족과 행정 역량의 미흡, 정치적 변화에 따른 정책 일관성의 우려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 또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정부 차원의 고위급 방산협력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EU의 전략적 자율성 차원에서 기존 방위산업 강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외에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산기업이 주요 무기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EU 방위산업 역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나. 전략적 상호 절충교역(Offset) 체계 구축

절충교역은 EU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한국 기업이 EU 방산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적 도구다. EU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과 유럽방위기금(EDF)을 통해 역내 제조와 기술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순 수출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절충교역을 전략적 방식으로 활용하면, EU 회원국이 요구하는 산업 활성화와 기술 자립을 달성하는 동시에 한국은 EU 공급망 내 파트너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⁹³⁾

93) 「방산서 중요도 커진 절충교역, 캐나다 잠수함사업서도 작용하나」(2025. 12. 8.) (검색일: 2025. 12. 17.).

이에 정부는 절충교역 체계를 제도적·전략적 차원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EU의 복잡한 조달 규정과 기술 이전 규범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EU 간 절충교역의 인정 범위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각 회원국과 협상할 때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기술이전의 범위와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불합리한 요구에 직면할 경우 국가가 협상 조정자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절충교역 이행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한-EU 공동 절충교역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충교역이 포함된 대형 계약에서는 정부 차원의 수출 금융, 보증지원, 위험분담 장치를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은 절충교역의 실질적 실행 주체이며, 그 성공 여부는 기업의 설계 능력과 현지 파트너십 구축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기업은 기술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조건부 기술 이전 모델을 활용하여 기술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EU의 산업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기업은 동유럽 국가들의 방산 생태계를 분석해, 부품 조달·조립·생산 등 생산체계의 일부를 현지화하고, 이를 통해 EU 공급망에 편입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절충교역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EU 회원국과의 공동 생산, 공동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 한-EU 첨단 R&D 공동개발 프로그램 시행

EU 집행위원회가 방위산업 강화 전략에서 제시한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 무인 무기체계는 방위역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자율 감시정찰 능력 확보, AI 기반 지휘통제 강화, 드론·무인전력 확대, 유럽형 우주 인프라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방산·안보·기

술정책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또한 국방 AI, 무인전력, 국방우주 등에서 급격한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어 양측의 협력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EU의 방산 R&D 구조가 다층적이며, 규제와 절차가 복잡해 역외국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기술적 실행 역량이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EU가 방위 목적의 EU 자금 활용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과 EU 간 R&D 협력을 비롯한 주요 방위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도 기대가 된다. 이에 따라 EU의 과학기술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이 민군 겸용 기술에도 적용하기로 합의 되었으며, 관련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⁹⁴⁾

정부는 한-EU 첨단 R&D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EU 유럽방위기금, 유럽방위청, 유럽우주청(ESA)에서 한국이 참여 가능한 R&D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측 공동 R&D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유럽방위기금은 역외국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참여 모델을 EU와 협상하여 '특수 파트너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EU 공동 방산혁신펀드를 구성하여 양측 기업 및 연구기관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셋째, 국방과학연구소(ADD)-EU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찰위성, 통신위성, 군사용 PNT(위치·항법·시간), 고해상도 전자광학 및 합성개구레이더(SAR) 센서 기술 등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무인기 군집 운용, AI 전장 실험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테스트베드 공동 운영을 EU와 협력해 구축할 수 있다.

94) 본 연구에서는 EU와의 협력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 차원의 양자 또는 소다자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개별 회원국의 방산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추후 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업은 첨단기술의 실질적 개발과 적용을 담당한다. 첫째, AI 기반 전투관리 체계, 드론 스웜(Drone Swarm), 자율주행 지상 전투체계, 전자광학 시스템, 군용 통신 및 데이터링크 등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에서 EU 기업 및 연구기관과 다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시제품 제작 및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둘째, 기업은 EU 회원국의 군사적 요구조건을 분석해 기술개발의 초점을 현지 전략 환경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예컨대 유럽 영토는 다양한 기후, 지형, 전자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한국보다 훨씬 광범위한 운용역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성능개량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공동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3국 수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EU 공동 개발한 무인기나 위성체계는 NATO 동맹국, 중동, 남미 시장에 공동 브랜드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협력국가들의 산업 기반 강화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 확대로 이어지는 ‘win-win’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⁹⁵⁾ 마지막으로 기업은 R&D 협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AI 기반 무기체계의 경쟁력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실제 운용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고 이를 모델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95) 한국에 진출해 있는 주요 유럽 방산기업은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 R&D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강조함. 국내 유럽 방산기업 CEO 면담 내용.

참고문헌

[국문자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4.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 방위사업청. 2025. 『'25~'39 국방기술기획서』.
- 오태현. 202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EU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5-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혜원.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전략문화: 위협 인식 변화와 방위 협력 진전」. 정책연구시리즈 2023-06.
- 정준오. 2025. 「EU의 방위자강 모색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 352.

[영문자료]

- Calcara, Antonio and Luis Simón. 2025. “Face to face: France, Germany and the future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32(6), pp. 1389-1413.
- Centrone, Macro and Meenakshi Fernandes. 2024. “Improving the Quality of European Defence Spending: Cost of non-Europe report.” European Parliament.
- Clapp, Sebastian. 2025. “European capability development planning.” EPRS At a Glance.
- Clapp, Sebastian, Martin Höflmayr, and Falk Vambrie. 2025. “Building a common market for European defence.” EPRS Brief.
- European Commission. 2024a. “European Defence Fund - Indicative multiannual perspective 2025-2027.”
- _____. 2024b. “A New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Achieving EU readiness through a responsive and resilient European Defence Industry.” JOIN(2024) 10 final.
- _____. 2024c.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and a framework of measures to

- ensure the timely availability and supply of defence products (EDIP).” COM(2024) 150 final.
- _____. 2025a. “White Paper on EU defence.”
- _____. 2025b. “Preserving Peace-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 JOIN(2025) 27 final.
- _____. 2025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Defence Readiness Omnibus.” COM(2025) 820 final.
- _____. 2025d. “Proposal for a Directive amending Directives 2009/43/EC and 2009/81/EC,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intra-EU transfers of defence-related products and the simplification of security and defence procurement.” COM(2025) 823 final.
- _____. 2025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to facilitate the transport of military equipment, goods and personnel across the Union. COM(2025) 847 final.
- _____. 2025f.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Military Mobility.” SWD(2025) 847 final.
- _____. 2025g. “EU Defence Industry Transformation Roadmap: Unleashing Disruptive Innovation for Defence Readiness.” COM(2025) 845 final.
- _____. 2025h. “Communication to the College on the notification to requesting Member States of the allocation of the loan amounts pursuant to Council Regulation 2025/1106.” C(2025) 6300 final.
- European Defence Agency(EDA). 2025. “Defence Data 2024-2025.”
-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2022. “A Strategic Compass for Security and Defence.”
- European Union. 2009. “Directive 2009/43/EC simplifying terms and conditions of transfers of defence-related products within the Community.”
- _____. 2017. “Council Decision (CFSP) 2017/2315 establishing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and determining the list of participating Member States.”
- _____. 2020. “Council Decision (CFSP) 2020/1639 establishing the general conditions under which third States could exceptionally

-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individual PESCO projects.”
- _____. 2023. “Regulation (EU) 2023/1525 on supporting ammunition production (ASAP).”
- _____. 2025. “Joint Declaration on the EU legislative priorities for 2026.” C/2025/6793.
- George, Mathew, Katarina Djokic, Zain Hussain, Pieter D. Wezeman, and Siemon T. Wezeman. 2025.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4.” SIPRI Fact Sheet.
- Giacomello, Giampeiro and Oltion Preka. 2023. “Sources of strength: mapping the defence sector in Europe.” *Defence Studies*, 23(4), pp. 531-560.
- Grevi, Giovanni. 2016. “A Global Strategy for a soul-searching European Union.” Discussion Paper, European Policy Center.
- Haas, Ernst. 1958.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Hackett, James and Ben Schreer eds. 2025. “Progress and Shortfalls in Europe’s Defence: An Assess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Marsh, Nicholas, Bruno Oliveira Martins, and Jocelyn Mawdsley. 2025. “The European Iron Network: the remarking of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defence production following the Ukraine war.”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1-21.
- McKinsey. 2025. “European defence tech start-ups: In it for the long run?”
- Mejino-Lopez, Juan and Guntram Wolff. 2024. “A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 in a hostile world.” Policy Brief, 29/24.
- _____. 2025. “Europe’s dependence on US foreign military sales and what to do about it.” Policy Brief, 27/25.
- Möhring, Johanna. 2024. “EUDIS, HEDI, DIANA: What’s behind three defense innovation acronyms?” *IFRI Memos*.
- Moravcsik, Andrew. 1993. “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A Liberal Intergovernmentalist Approac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1(4), pp. 473-524.
- NATO. 2025. “Defense Expenditure of NATO Countries(2014-2025).”

- Paik, Wooyeal. 2024. "South Korea's Emergence as a Defense Industrial Powerhouse." IFRI ASIE Visions, No. 139.
- Sabatino, Ester and Tim Lawrenson. 2025. "The SAFE Regu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Non-EU Defence Supplier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Santopinto, Federico. 2024.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of EDIP and European Defence: The Main Proposals on the Table Isolated and Explained." Armament Industry European Research Group.
- _____. 2025. "The European Union's Role in Financing the Defence Industry." Armament Industry European Research Group.
- Schulze-Marmeling, Sebastian, Peter Wilke, and Herbert Wulf. 2022. "Defense Industry in Europe."
- Torreblanca, Jose Ignacio. 2023. "Onwards and outwards: Why the EU needs to move from strategic autonomy to strategic interdependenc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온라인 자료]

- "2025 Top 100 Defence Companies." Defence News. <https://people.defensenews.com/top-100/>(검색일: 2025. 10. 30.).
- Carnegie endowment. 2025. "Taking the Pulse: Does Meeting the 5 percent of GDP Target Enable Europe to Confront the Russian Threat?" (June 26). <https://carnegieendowment.org/europe/strategic-europe/2025/06/taking-the-pulse-does-meeting-the-5-percent-of-gdp-target-enable-europe-to-confront-the-russian-threat?lang=en>(검색일: 2025. 7. 29.).
- Croitorov, Olga, Reinhard Felke, Robert Krämer and Mirko Licchetta. 2025. "Macroeconomic impacts of defence spending." (December 22). <https://cepr.org/voxeu/columns/macroeconomic-impacts-defence-spending>(검색일: 2025. 12. 22.).
- decode39. 2024. "A snapshot of Italy's growing defence industry." (November 27). <https://decode39.com/9741/mediobanca-report-italy-growing-defence-industry/>(검색일: 2025. 11. 11.).

- Deutschland.de. 2025. "A strategic industry with a future." (July 10). <https://www.deutschland.de/en/topic/business/german-arms-industry-on-a-growth-trajectory>(검색일: 2025. 11. 11.).
- ECB. 2025. "Economic financial and monetary developments." <https://www.ecb.europa.eu/press/economic-bulletin/html/eb202506.en.html>(검색일: 2025. 12. 18.).
- EUDIS. "Defence Hackathons: Put your innovative ideas to the challenge." https://eudis.europa.eu/eudis-tracks/defence-hackathons_en(검색일: 2025. 9. 30.).
- European Commission. "EDF Calls for Proposals 2025." chrome-extension://efaidnbmninnibpcajpcglclefindmkaj/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document/download/565f94-b210-4aa3-b7b1-bd5ede011226_en?filename=EDF%20WP%202025%20factsheet%20v5.pdf(검색일: 2025. 9. 10.).
- _____. "Security Action for Europe." https://defence-industry-space.ec.europa.eu/eu-defence-industry/safe-security-action-europe_en(검색일: 2025. 7. 20.).
- _____. 2024. "EU boosts defence readiness with first ever financial support for common defence procurement." (November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5827(검색일: 2025. 8. 15.).
- European Council. 2022. "A Strategic Compass for a stronger EU security and defence in the next decade." (March 3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21/a-strategic-compass-for-a-stronger-eu-security-and-defence-in-the-next-decade/>(검색일: 2025. 8. 23.).
- _____. 2025. "EU defence readiness: Council launches 6th wave of new PESCO projects." (May 2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5/27/eu-defence-readiness-council-launches-6th-wave-of-new-pesco-projects/>(검색일: 2025. 9. 1.).
- _____. 2025.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Council gives final approval." (December 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2/08/european-defence-industry-programme-council-gives-final-approval/>(검색일: 2025. 12. 10.).

- Fiott, Daniel. 2025. "Return on Investment? Understanding the Rationales for Increased Military Expenditure in Europe." (August 29). <https://csds.vub.be/publication/return-on-investment-understanding-the-rationales-for-increased-military-expenditure-in-europe/>(검색일: 2025. 10. 1.).
- IPSI. 2025. "The EU Critical Raw Materials Act and the defence industry." (July 8). <https://ipisresearch.be/weekly-briefing/the-eu-critical-raw-materials-act-and-the-defence-industry/>(검색일: 2025. 11. 3.).
- NATO. 2024. "NATO releases list of 12 defence-critical raw materials." (December 11). <https://www.nato.int/en/news-and-events/articles/news/2024/12/11/nato-releases-list-of-12-defence-critical-raw-materials>(검색일: 2025. 10. 20.).
- _____. 2025. "Defence expenditures and NATO's 5% commitment." (June 27). <https://www.nato.int/en/what-we-do/introduction-to-nato/defence-expenditures-and-natos-5-commitment>(검색일: 2025. 8. 10.).
- OCCAR. "OCCAR- About Us." <https://www.occar.int/about-us>(검색일: 2025. 9. 10.).
- PESCO. "About PESCO." <https://www.pesco.europa.eu/about/>(검색일: 2025. 10. 1.).
- Polytechnique Insights. 2025. "Defence industry: how Europe is boosting production." (April 29). <https://www.polytechnique-insights.com/en/columns/geopolitics/defense-industry-how-europe-is-boosting-production/>(검색일: 2025. 10. 20.).
- SIPRI. 2025. "NATO's new spending target: challenges and risks associated with a political signal." (June 27). <https://www.sipri.org/commentary/essay/2025/natos-new-spending-target-challenges-and-risks-associated-political-signal>(검색일: 2025. 7. 29.).

[보도기사/언론기사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 복한 대한민국」. <https://www.korea.kr/govVision/>(검색일: 2025. 11. 20.).

- 「방산서 중요도 커진 절충교역. 캐나다 잠수함사업서도 작용하나」. 2025. 『연합뉴스』. (12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106300003> (검색일: 2025. 12. 17.).
- 방위사업청. 2022.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 170억 불 규모 달성」. 보도자료. (11월 4일).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e959d7376747acd9ad1f15ec989512d7&rs=/docViewer/result/2022.11/04/e959d7376747acd9ad1f15ec989512d7>(검색일: 2025. 9. 30.).
- _____. 2025. 「멈추지 않는 국방 첨단산업 육성! 방산혁신기업 100 4기 21개사 선정」. 보도자료. (12월 16일). <https://www.dapa.go.kr/dapa/doc/selectDoc.do?docSeq=57912&menuSeq=3069&bbsSeq=326¤tPageNo=3&recordCountPerPage=10>(검색일: 2025. 12. 18.).
- _____. 2025. 「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 보도자료. (8월 1일). <https://www.dapa.go.kr/dapa/doc/selectDoc.do?docSeq=21521&menuSeq=3069&bbsSeq=326¤tPageNo=1&recordCountPerPage=10>(검색일: 2025. 12. 2.).
- _____. 2025.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 보도자료. (12월 1일). <https://www.dapa.go.kr/dapa/doc/selectDoc.do?docSeq=57829&menuSeq=3069&bbsSeq=326¤tPageNo=1&recordCountPerPage=10>(검색일: 2025. 12. 2.).
-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5. 「AI반도체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박차 가한다」. 보도자료. (4월 30일).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4d1355ff1d4c5299d34258d39953ebe4&rs=/docViewer/result/2025.04/30/4d1355ff1d4c5299d34258d39953ebe4> (검색일: 2025. 8. 1.).
- 산업통상부. 2025. 「국방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I) 가속화’를 위한 동행」. 보도자료. (12월 3일).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A%B5%AD%EB%B0%A9%EB%B6%80-%EA%B3%BC%EA%B8%B0%EC%A0%95%ED%86%B5%EB%B6%80-%EC%82%B0%EC%97%85%EB%B6%80-%EC%A4%91%EA%B8%B0%EB%B6%80%2C+%E2%80%98EA%B5%AD%EB%B0%A9%C2%B7%EC%82%B0%EC%97%85+%EB%B6%84%EC%95%BC%EC%9D%98+%EC%9D%B8%EA%B3%B5%EC%A7>

- %80%EB%8A%A5%EC%A0%84%ED%99%98(검색일: 2025. 12. 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에 5조 6천억 유도미사일 ‘천무’ 공급계약」. 2025. 『한겨레』. (12월 31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7332.html(검색일: 2026. 1. 2.).
- “Canada to sign up to flagship EU defense credit fund.” 2025. *DW*. (December 2). <https://www.dw.com/en/canada-eu-safe-defense/a-74978307>(검색일: 2025. 12. 5.).
- “Commission allocates two-thirds of EU’s €150 billions SAFE defence loans to five countries.” 2025. *Euractiv*. (September 9). <https://www.euractiv.com/news/commission-allocates-two-thirds-of-eus-e150-billion-safe-defence-loans-to-five-countries/>(검색일: 2025. 9. 29.).
- “Defence expenditures and NATO’s 5% commitment.” 2025. NATO. (June 27). <https://www.nato.int/en/what-we-do/introduction-to-nato/defence-expenditures-and-natos-5-commitment>(검색일: 2025. 8. 10.).
- “EU confirms Japan’s Bid to Join Security Action for Europe Defense Fund.” 2025. *Defense Mirror*. (December 13). https://defensemirror.com/news/40706/EU_Confirms_Japan__s_Bid_to_Join_Security_Action_for_Europe_Defense_Fund(검색일: 2025. 12. 14.).
- “European drone wall, other ‘flagship’ defence projects at risk in EU power struggle.” 2025. *Reuters*. (December 16).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european-drone-wall-other-flagship-defence-projects-risk-eu-power-struggle-2025-12-15/>(검색일: 2025. 12. 20.).
- “Le Sud-Ouest de la France veut devenir un nouveau creuset des industries d’armement.” 2025. *Le Monde*. (April 25).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5/04/25/le-sud-ouest-de-la-france-veut-devenir-un-nouveau-creuset-des-industries-d-armement_6599973_3234.html(검색일: 2025. 11. 11.).
- “Turkey and South Korea apply to join EU arms scheme.” 2025. *Euractiv*. (September 11). <https://www.euractiv.com/news/turkey-and-south-korea-apply-to-join-eu-arms-scheme/>(검색일: 2025. 11. 10.).

[DB/통계자료]

Eurostat. “Government deficit/surplus, debt and associated data.”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gov_10dd_edpt1/default/table?lang=en&category=gov.gov_gfs10.gov_10dd(검색일: 2025. 10. 13.).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https://armstransfers.sipri.org/ArmsTransfer/ImportExport>(검색일: 2025. 12. 2.).

[전문가 인터뷰]

〈유럽 출장 면담: 2025. 9. 21.~9. 28., 브뤼셀, 파리, 로마〉

Bruegel 연구소 방위 전문가

EU 집행위원회 정책관

European Parliament 방위 관련 정책분석관

IAI(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방위·안보·우주 분야 전문가

Luiss 대학교 방위산업 분야 교수

NATO Defence College 박사연구원

Thales Group 대외협력 담당자

Vrije Universiteit Brussel(VUB) 유럽 방위 전문가

〈국내 유럽 방산기업 CEO 면담: 2025. 11. 6.〉

Thales Group, Safran, Airbus, Leonardo, Kebni 등 5대 기업 한국법인장

Strategy for Strengthening European Defence Indust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EU Cooperation

Taehyun Oh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European Union's (EU) defense and security architecture has relied almost entirely on the US-centered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While integration at the EU level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the economic and financial integration, defense and security remain relatively underdeveloped due to ongoing tensions between member states' sovereign authority and supranational leadership. However,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marked a fundamental turning point in Europe's security landscape. Not only was it the first full-scale war on the European continent since World War II, but it also coincided with renewed criticism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EU's excessive dependence on NATO and demands for increased defense spending. As a result, the EU came to recognize more acutely the necessity of securing strategic autonomy and strengthening its own defense capabilities. In response,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a strategy to reinforce the defense industrial base and build an autonomous and

competitive defense posture by 2030, launching full-scale policy effor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U-based defense firms and promote joint procurement.

Even before the Russia-Ukraine war, the EU had sought to enhance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through mechanisms such as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the European Defense Fund (EDF), and the Coordinated Annual Review on Defense (CARD). PESCO provides a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 in defense and security, with 75 project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while the EDF support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defense technologies and equipment with a budget of €8 billion for the 2021-27 period. The EU Defense Innovation Scheme (EUDIS) aims to foster an innovation ecosystem for start-up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ollowing the war, however, the EU has adopted more proactive, immediate, and robust defense measures. Notably, 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 (ASAP) aims to supply one million rounds of artillery ammunition to support Ukrain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expanding manufacturing capacity within the EU. In addition, the 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 (EDIS) - the EU's first-ever defense industrial strategy - encourages member states to invest more, better, and collectively. The 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initiative is a €150 billion loan-guarantee program designed to support joint weapons procurement and represents the largest defense-related financial instrument ever established at the EU level. Furthermore, the European The Defense Industry Programme

(EDIP) will provide €1.5 billion in grants between 2025 and 2027 to strengthen the EU's defense posture by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promoting joint procurement. The EDIP consists of three pillar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and responsiveness of the European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EDTIB), improving the timely availability and security of the supply of defense products, and supporting Ukraine's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DTIB). Together, these measures aim to ensure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Europe's defense industry and establish a supply chain capable of rapidly procuring critical materials during crises.

Nevertheless, the EU defense market faces a structural challenge of fragmentation. With 27 member states operating under different procurement systems and regulatory frameworks, building a pan-European defense procurement market remains difficult. As a result, as of June 2023, 76% of weapons procured by EU member states were imported, with the United States accounting for a dominant 63% share. Defense industries within the EU, are primarily concentrated in France, Germany and Italy and, the EU aims to use these countries as anchors for a renaissance of the European defense industrial base. In this process, the EU's defense industrial innovation roadmap emphasizes that disruptive technologies -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cyber capabilities and space-based systems - are fundamentally transforming the nature of warfare. Accordingly, the EU highlights a 'spin-on' development approach that rapidly integrates cutting-edge civilian technologies

into the defense sector.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et itself the goal of becoming the world's fourth-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and has designated advanced defense industries as a national strategic sector. In its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lanning Document for 2025-2039,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has outlined a roadmap to secure ten strategic technologies, including AI, manned-unmanned teaming, quantum technologies, and space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lans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by defense firm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K-Defense Export Fund" and expanded tax incentives. Korea's defense industry is particularly competitive in terms of mass-production capacity, rapid delivery, high performance relative to cost, and strong government backing. Poland has emerged as a key partner, accounting for a substantial share of Korea's defense exports, with major platforms including the K2 main battle tank, the K9 self-propelled howitzer, and the FA-50 light attack aircraft. However, Korea's level of core technological capability in advanced domains remains at approximately 82% of that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indicating a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and its export structure remains overly concentrated in a limited number of markets.

As the EU actively seeks to enhance its own defense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by supporting EU-based defense firms and prioritizing European-origin products in joint procurement- there is a risk that Korean defense companies may face growing barriers to entry in the

European market. Nevertheless, the potential synergies arising from the complementary strengths of Korea and the EU should not be overlooked. While the EU excels in advanced technology, Korea has strengths in production capacity and cost efficiency. Moreover, as the EU seeks to reduce excessive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while enhancing its internal defense capabilities under the banner of strategic autonomy, Korea could be a valuable partner. This, in turn, suggests new opportunities for Korean defense firm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Korea should pursue the joint establishment of defense industry clusters in Eastern Europe, centered on existing major export destinations such as Poland and Romania. By building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facilities and localized production systems, Korean firms can meet “Made in Europe” requirements. Defense companies should analyze the industrial ecosystems of individual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differentiate their roles accordingly. For example, Poland could serve as a hub for tank and self-propelled artillery assembly and maintenance, while Romania could be developed as a base for artillery ammunition and component production. By creating a horizontally integrated supply chain, Korean firms can secure continuous orders across the EU.

Second, a strategic and reciprocal offset framework is needed.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exports, Korea should design models that combine localized technology transfer with industrial cooperation to secure a sustainable position in the EU market. At

the government level, the scope of offset recognition should be negotiated in advance, and guidelines for technology prot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excessive demands for technology transfer. At the same time, firms should design technology-transfer models that are phased and conditional, and which contribute to local industrial development while preserv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Long-term contracts with local firms and the operation of technical training programs will be essential to facilitate natural integration into EU supply chains.

Finally, Korea and the EU should expand their joint R&D initiatives in advanced and disruptive technologies of shared strategic importance, such as AI, space, and cyber capabilities, and operate joint testbed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EU joint defense innovation fund would allow risks to be shared through co-investment, whil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between Korea's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EU research institutions could support joint research on reconnaissance satellites, military 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and AI-enabled battlefield experimentation. At a corporate level, Korean companies should form multilateral consortia with EU firms in areas such as AI-based battle management systems and drone swarm oper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joint prototype development.

<책임>

오태현

기획재정부 전문위원 역임

유럽중앙은행 초청연구위원 역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asroc101@kiep.go.kr)

저서 및 논문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공저, 2024)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공저, 2024)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5년

- 25-01 아세안 주요국 여성 기업의 디지털 친숙도에 기반한 생산성 보완 연구 / 김제국·신민규·신민이
- 25-02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 김주혜·양병섭
- 25-03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성과 및 전망 / 이철원·임유진·김초롱
- 25-04 주요국의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전략과 시사점 / 김은미·김소은
- 25-05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 김영선·유광호
- 25-06 유럽의 첨단산업 지원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이현진·임유진
- 25-07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 홍성우·김승현
- 25-08 일본의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이정은
- 25-09 AI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 / 강민지
- 25-10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s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Towards a Matured Economic Partnership / Choong Yong Ahn·Jagannath Panda
- 25-11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 허재철
- 25-12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김정곤·나승권
- 25-13 브라질의 통상다변화 전략과 시사점: 유럽과 협력을 중심으로 / 박미숙·손은아
- 25-14 크루즈 산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방안 연구 / 이정균·김법환·장하이쉬
- 25-15 지속가능한 소비친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 안준모·정지은·김지현
- 25-16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과 한-EU 협력방안 / 오태현
- 25-17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성과와 과제 / 이철원·나수엽·임유진

■ 2024년

- 24-01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 오수현
- 24-02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엄준현·이보람
- 24-03 인도적 자원이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5년 네팔 지진을 중심으로 / 정원혁·이예림
- 24-04 중국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 분석 연구: 고대역 메모리 및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 백서인·자오야리
- 24-05 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예의 시사점 / 강문수·이지은
- 24-06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 최용찬·허경무

■ 2023년

- 23-01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김제국
- 23-02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 이규엽·엄준현
- 23-03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 유광호·이지은
- 23-04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김남석
- 23-05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 김준동·고준성·강준구
- 23-06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 김지현
- 23-07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 김준동·이성봉·김혁황
- 23-08 중국 태양광·BESS 산업의 글로벌 시장 독점화와 주요국 대응 / 김주혜
- 23-09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무역·투자자유화 성과와 시사점 / 김홍원·이한나
- 23-10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 정재완·이재호
- 23-11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 금혜윤
- 23-12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 최재희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일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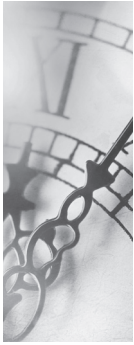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rategy for Strengthening European Defence Indust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EU Cooperation

Taehyun Oh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방위산업 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U 역내 방위시장 분절화 개선과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 및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EU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